



사회진보연대 기관지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짚어내고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우리 사회운동의 길을 밝히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겠습니다.

월간 사회운동 홈페이지
<http://www.movements.or.k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를 반대하고,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민중의 노동권·여성권을 쟁취하고, 민중의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지부에서 여성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반전팀과
빈곤팀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의 쇄신과 확장을 꾀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이론·정책 활동, 시민교육,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연대운동을 펼쳐고 있습니다.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http://www.pssp.org>

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홈페이지 www.pssp.org | 이메일 pssp@jimho.net | 월간 사회운동 www.movements.or.kr 전화 02-778-4001~2 팩스 02-778-4006 | 주소 140-801 서울시 양천구 길원동 8-49 신생빌딩 4층

사회진보연대

광우병, 한미FTA 와 민중의 식량주권

광우병
한미FTA
와
민중의
식량주권

값 2,000원

사회진보연대

목차*

- ❶ 발간사

- ❶ 광우병과 곡물가격 폭등으로 본 자본주의 식량위기___4

- ❶ [자료1] 2007 닐레니 식량주권 선언문(닐레니 선언)___36

- ❶ [자료2] 2007 닐레니 식량주권포럼 종합보고서___41

- ❶ 광우병 투쟁을 한미FTA 반대투쟁으로___65

발간사

2008년 5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 사과를 하겠다고 나선 대국민담화에서 오히려 “유가·식량·원자재 값의 상승과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이념이나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인 한미 FTA 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과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제거되었는가? 둘째, 광우병 위험을 낳은 세계적 식량생산체계는 결코 변혁될 수 없는 것인가? 셋째, 광우병 위험을 불사할 정도로 한미 FTA는 한국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선택지인가? 자유무역에 대한 민중적 대안은 없는가? 우리의 소책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다. 이 책에서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우병 확산의 일차적 원인은 1980년대 동물성 사료의 보급 때문이었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계속 허용하는 것에는 랜더링(동물부산물가공)산업, 도축업, 자영목축업과 이를 지배하는 초민족 농업기업의 막강한 압력이 작용했다. 특히 현재 미국의 4대 정육업체는 미국 소의 84%를 도살한다. 이들 초민족 농업기업은 농업자금 대출부문도 운영하는데 자영 목축업자는 대출을 위해 그 기업이 제공하는 송아지와 사료 구입을 약속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한 광우병 발생 위험이 근본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다고 해도 광우병을 낳은 공업적 축산과 초국적 자본이 장악한 세계적 식량체계는 지속될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 농업식량체계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 규모면에서만 보면 세계 식량생산량은 세계 인구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여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8억 5천만 명 이상이 만성적인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곡물가격 폭등과 식량위기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농업체계가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기후와 역사에 따라 형성된 전통적인 농업생산 체계가 파괴되었고, 제3세계 농업수출국에서 식량위기가 발생하

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 2월에 아프리카 말리에서 개최된 <2007 닐레니 식량주권 포럼>은 국제 소농조직인 비아캄페시나(농민의 길)를 주축으로 세계 사회운동 그룹들이 모여 자본주의 식량생산체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국제회의였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초민족 농업기업이 주도하는 세계 식량생산체계의 대안으로 민중의 식량주권을 제시했다. 이들이 제시한 식량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어,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며 '스스로 식량과 농업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민중의 권리'다. 이들은 초민족 농업기업 중심의 무역·식량 체계를 해체함으로써 지역생산자가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다양성을 이용하고 관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모든 민중에게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투명한 무역을 촉진하고자 한다.

셋째, 세계경제기구나 중심부 국가가 강요하는 국제무역투자규범은 결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다. 1980년대 이후로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물결이 일었지만 세계 경제의 부는 미국과 서유럽, 동아시아 삼극으로 더욱 더 집중되고 있다. 국제무역 투자규범이 지배하는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통합된 세계'라는 그들의 구호와는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적 교환은 수단들에 불과하며, 그 수단은 구체적 상황에 맞게 민주적으로 정의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결코 바람직하거나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가 발간하는 <광우병, 한미 FTA와 민중의 식량주권>이 세계적인 식량생산체계와 무역투자체계의 근본적 모순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08년 6월 5일

사회진보연대

자본주의 식량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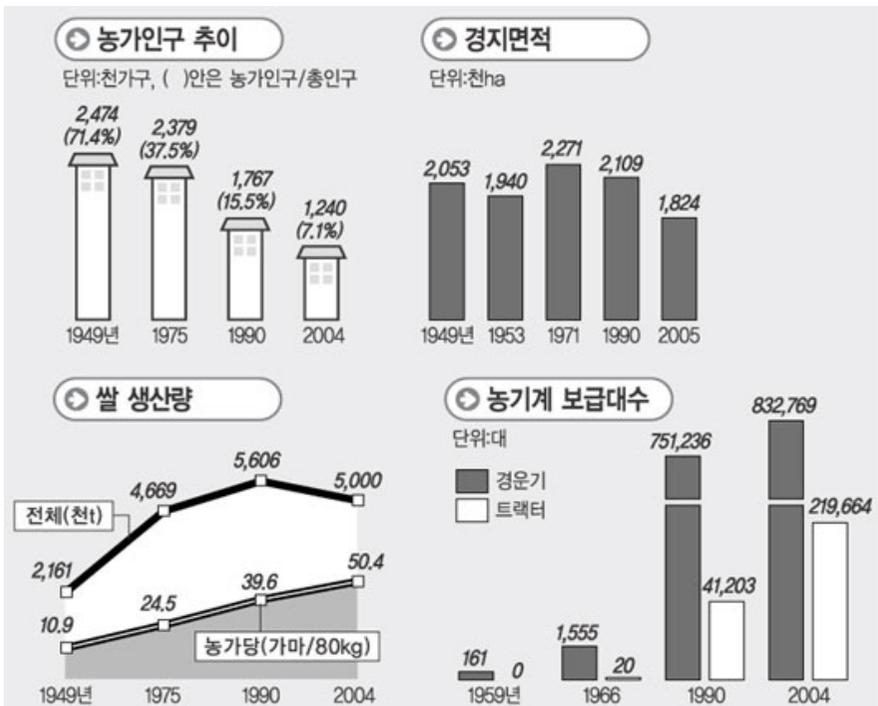
1.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광우병, 조류독감, GMO 식품, 곡물가격 폭등 등으로 농업과 먹거리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진정 농업이나 먹거리에 대해 꼼꼼이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것은 도덕적인 당위의 물음이 아니다. 농촌/농업/농민과 먹거리를 비가시화하고, 우리의 관심에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체계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고, 농업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 과정이 되고, 식품이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회다. 이런 구조에서 농업과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다. 최근 건강과 웰빙 열풍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종 소비자로서의 관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시에 모여 사는 '최종 소비자 시민'이 농업과 먹거리 생산과 소비 전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도시와 농촌간의 분리와 이에 비롯되는 문제를 신진대사의 균열(metabolism rift)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했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에 따르면 “20세기 후반의 가장 극적이고 가장 영향이 널리

1) 먹거리는 식량, 식품, 농산물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영어 'food'의 번역어로도 사용된다. 식량은 총량적인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식품은 최종 상품의 의미가 강하다. 농산물은 주로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를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용법을 아우르고 포괄적으로 지칭할 때 '먹거리'로 쓰되, 경우에 따라 다른 용어도 사용한다. '먹을거리'로 쓰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있지만 용어의 경제성을 위해 먹거리로 쓴다.

미친 사회적 변화이자 우리를 과거세계로부터 영원히 단절시킨 변화는 농민층의 사멸이다.”(『극단의 시대』, p.402)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농촌인구는 870만 명, 농가인구는 340만 명으로 각각 인구의 18.5%, 7%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대략 절반)은 여전히 농촌에서 살고 있다. 또 아무리 풍요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농업은 인간사회가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풍요도 자본주의 세계 일부의 것이지 모든 인민의 풍요가 아니다. 유엔농업식량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8억 명 이상이다. 한국의 빈곤층(최저생계비 미달+차상위 계층)도 716만 명이나 된다. 굶주림과 빈곤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그림 1> 한국 농업변화 추이

농가인구, 경지면적, 쌀 생산량, 농기계 보급의 변화로 한국 농업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농민은 줄어든 반면 농업의 기계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식량자급률로 보는 한국 농업의 현주소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얼마나 될까? 조금씩 변동하지만 보통 25%~30% 사이다. 주식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제외하면 5%밖에 안 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곡물자급률로 채소, 과일, 고기, 수산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종류의 먹거리를 환산하여 계산할 단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의 식량자급률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안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는 칼로리 자급률이라는 개념이 있다. 한국의 칼로리 자급률은 46% 수준이다. 곡물자급률에는 축산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등이 포함되는데, 사료용 곡물은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곡물자급률이 칼로리 자급률 보다 낮게 계산된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최종 먹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칼로리 자급률인 46%가 한국인이 먹는 음식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거리의 비율이다.

한국은 OECD 30개 국가 중 곡물자급률 27위로 최하위다.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곡물자급률도, 칼로리 자급률도 급속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쌀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민운동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농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을 29%로 칼로리 자급률을 48%로 제고하겠다는 자체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된 정책의지가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다.

2. 신자유주의가 낳은 질병, 광우병

○ 광우병은 신자유주의 탈규제, 시장화의 산물²⁾

광우병은 1984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인간에게 발병한 것은 1996년 처음 보고되었다. 이후 과학자들은 어떻게 소에게서 양의 스크래피와 유사한 뇌질환이

2) 광우병의 발생 배경에 대해서는 참세상(www.newscham.net)에 연재된 김기흥 박사의 글을 참고했다. 김기흥 박사의 글이 네 차례 연재되었는데 광우병의 역사와 과학적 논란에 대한 좋은 자료이다.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자료실에 연재물을 편집해서 등록해 두었다.

일어나게 되었는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영국의 과학자들은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의 부산물이 소의 사료로 흘러들어간 강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스크래피는 18세기 중반부터 보고되었던 양의 질병으로 광우병의 원형으로 추측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영국을 포함한 서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을 첨가하여 만든 육골분 사료를 소에 먹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1톤당 가격이 45달러로 같은 알팔파와 같은 곡물 사료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1979년 영국에서 집권한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육골분 사료를 만드는 랜더링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육골분 사료 생산은 각종 원재료를 높은 온도에서 녹이는 과정을 거친다. 대처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육골분 생산업자들은 낮은 온도에서 지방을 처리하게 된다. 당시는 1978년 2차 오일쇼크로 고유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지방에 둘러싸인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의 부산물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었다. 즉, 완전히 고온 처리되지 않은 채 육골분의 재료로 유입되었다. 육골분 사료에 유입된 스크래피 병원체는 양과 소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장벽을 뛰어넘어 광우병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광우병의 직접적인 원인, 육골분 사료

뼈와 내장 등 부산물을 식용으로 소비하지 않는 서구에서는 가축의 40%는 고기로 소비되지만 뼈, 머리, 내장, 피 등 나머지 60%는 버려진다. 미국산 수소의 무게는 700~1,000kg 정도다. 1,000kg이라면 부산물이 600kg 나온다. 이것을 재가 공하여 동물성 지방과 사료를 생산하는 것을 랜더링이라고 한다. (우리말로 유키면 동물부산물가공 정도 되겠다.) 랜더링 산업의 원료로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가축의 부산물 외에도 소매점, 식당 등에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 폐기름 등이 사용된다. 병들거나 죽은 가축, 애완동물의 사체 등도 널리 사용되었다. 미국에서 연간 2,000만 톤 정도 발생하는 동물 부산물은 생태적 순환에서 괴리된 대량 육식 문화의 이면이다.

랜더링 공정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 우선 거대한 톱니바퀴가 설치된 커다란 통 속에 가축의 부산물을 들이부어 분쇄한다. 이렇게 분쇄한 혼합물을 135도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표면 위로 지방 덩어리가 떠오른다. 이 지방 덩어리는 식용 동물성 지방이나 화장품과 비누 등의 원료로 쓰인다. 지방을 제거하면 랜더링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수프처럼 된 나머지 부분은 건조 후, 다시 분쇄된다. 최종적으로 남은 회색 가루가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동물성 사료다. 호르몬 약품과 함께 쓰는 이 동물성 사료야 말로 가축의 살을 빨리 찌우는 데 가장 값싼 방법이다.

동물 부산물을 가공하여 유용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의 랜더링 산업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근대적인 랜더링 산업은 19세기 말에 성립되었다. 원래 랜더링 산업의 주요 생산물은 비누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 지방이었다. 1950년에 미국 랜더링 산업은 50만 톤의 동물성 지방을 비누 제조업에 공급했다. 하지만 비누의 원료가 화학 합성물로 대체되면서 동물성 지방의 수요가 급감한다.

따라서 랜더링 산업은 새로운 수요를 개척해야했고 이것이 동물성 사료의 개발로 이어졌다. 현재 랜더링 산업에서 동물성 사료의 비중은 생산량 기준으로 약 55%로 530만 톤 가량의 동물성 사료가 매년 생산되고 있다. 만약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가 전면 금지된다면 랜더링 산업에게는 큰 재앙일 것이다. 또 도축업자는 이런 랜더링을 통해서 매년 24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액을 올린다. 동물 사료 덕에 그들은 주머니에 돈을 채운다. 랜더링 과정도 독립적인 사업에서 도축장 옆에 설치된 초민족 농기업의 한 공정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미국이 동물성 사료를 계속 허용하는 데는 랜더링 산업, 도축업자, 농업자본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물성 사료의 원료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감자를 튀기고 남은 기름이나 음식 찌꺼기 등 지방이 들어간다. 슈퍼마켓에서 팔다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도 들어간다. 작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은 포장이나 스티로폼 그릇도 제거하지 않은 채 분쇄기에 그대로 집어넣는다. (...) 초록색 비닐봉투도 던져진다. 그 안에는 인력사한 개와 고양이의 사체가 들어 있다.”

“(죽은 도로에서 차에 깔려 죽은 여러 종류의 동물 사체까지 넣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마지막 ‘양념’으로 가금류 퇴비가 있다. 10년 전부터 닭 사육장 바닥에 쌓여 있는 배설물과 깃털까지 모아서 ‘랜

더링'에 사용한다. 사육하는 닭 83%가 식중독균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는 매우 위험하다.”

“뼈먹은 것이 있다. 수의사는 동물을 안락사할 때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을 주사하는데, 이 약물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 (애완)동물 사체 중 대부분은 목걸이형 버클, 기생충 구제약을 건채 들어온다. 이 살충제 성분 역시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가금류 퇴비, 돼지·소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호르몬, 항생제 역시 마찬가지다.”

『독소 죽음을 부르는 만찬』, 윌리엄 레이몽(2008), 랜덤하우스

○ 미국 농업과 축산의 역사

광우병과 같은 최근의 전세계적 식품 파동은 20세기에 녹색혁명을 통해 정착된 산업화된 농업과 세계화된 식품생산 및 유통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광우병은 산업화, 공장화된 자본주의 축산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에서 진행된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축산에서의 생산성 혁명을 일컫는 말)은 생산성의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다. 이 미국식 농업·축산 체계가 하나의 모델로 전 세계에 확장되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의 구조를 미국 축산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은 대공황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1935년 '농업 조정법'을 개정하여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게 지지했다. 농가 보호와 녹색혁명의 성공으로 잉여 농산물이 증가했는데 이를 1950년대에는 원조물자로 해외에 처분했다. 처음에는 무상 원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상업 가격으로 유통시킨 원조 정책으로 카길 같은 거대 곡물상이 부를 축적하고, 전세계에 미국식 농업관행과 식문화가 이식되었다. 대공황과 녹색혁명은 미국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공황으로 곡물가격이 떨어지자 미국 축산업자들은 저렴한 곡물을 가축에게 먹이기 시작했다. 1950년대 이후에는 값싼 잉여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동물의 사료로 전환되었다.

한편 1950년대 말부터 비육장이 성업하는데 비육장은 점차 교외로 이전한 도축장과 통합되었다. 20세기 전반까지 미국에는 도축장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했다.

하지만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환경개선의 요구가 높았고 정육노조를 무력화하고 값싼 이주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축장을 교외로 이전한다. 교외에서는 도축장과 비육장을 지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다. 또 도축장은 정육장과 구분이 불가능해지는데 냉장과 포장 기술의 발전으로 도축한 소를 그 자리에서 부위별로 자르고 포장해서 출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축장과 이웃하고 있는 비육장은 도축되기 전에 소의 몸집을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수소는 보통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1400kg 정도의 곡물사료를 먹고 호르몬제, 항생제를 맞으면서 180kg 가량을 찌운다. 이렇게 되어 20세기 중반에 비육-도축-정육이 결합된 미국식 축산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송아지를 키우는 전통적인 목축업자의 일과 정육한 소고기를 판매하는 소매업 등 나머지 부문은 1970년대 이후에 통합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초에 미국정부는 국제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추진했다. '1973년 농업법'으로 잉여농산물과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생산 제한을 해제하고 수출을 장려했다. 잉여 농산물 정책 변화로 미국이 세계농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자 유럽과 미국 간의 시장 쟁탈전이 과열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민족 농업자본은 제3세계 농업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수직적 통합으로 농자재 산업과 영농, 유통, 가공, 판매를 장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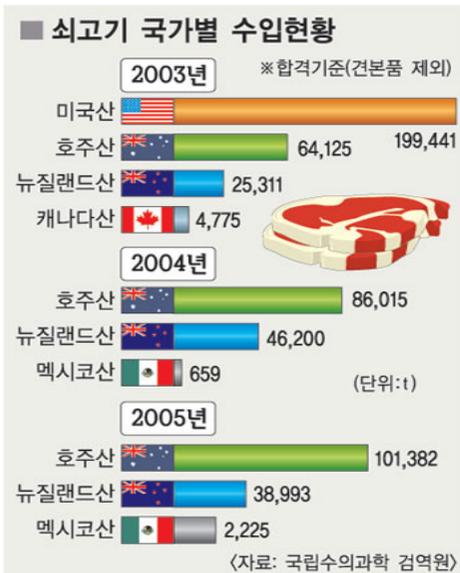
현재 미국의 4대 정육업체인 콘아그라, IBP(타이슨 푸드), 엑셀(카길), 내셔널 비프는 미국 소의 84%를 도살한다. 또 이들은 비육장 운영이나 선계약과 입도선매 방식의 종속적 공급으로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20%를 관리하고 있다. 카길은 세계 최대의 사료 업체이기도 하다. 농업자금 대출 부문도 초민족 농기업에 통합되고 있는데 농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농민은 그 기업이 제공하는 송아지와 사료 구입을 약속해야 한다. 목축업자도 농민처럼 초민족 농기업의 자본축적 과정에서 위험성 높은 한두 부문을 떠맡는 일종의 도급 노동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수직적 통합과 독과점으로 자영 목축업자는 소의 가격을 낮추어 팔수밖에 없어서 수익과 생존에 압박을 받았다. 광우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육골분 사료가 1980년대에 확산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 한국은 광우병의 안전지대?

한국에서 광우병이 이슈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 말에 광우병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독일, 이탈리아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고 프랑스의 까르푸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감염된 쇠고기의 유통 의혹이 번지면서 광우병 문제가 전 유럽을 휩쓸었다. 이때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한국에까지 확산되었다. 당시에 정부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소의 부산물을 먹었으나 인간 광우병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청정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감정적인 것으로 치부하

고, 언론과 광고를 통해 국민을 계몽하면 문제가 사라질 것처럼 행동했다. 정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으면 국내에서 광우병의 위험은 사라지는 것일까?

2000년 이후 광우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국산 쇠고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12월과 2001년 1월에 각각 육골분 사료와 남은 음식물 사료를 소, 양과 같은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했다. 영국은 1988년, 미국은 1998년부터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것이다. 또 유럽과 일본에서는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³⁾로 만



<그림 2> 쇠고기 국가별 수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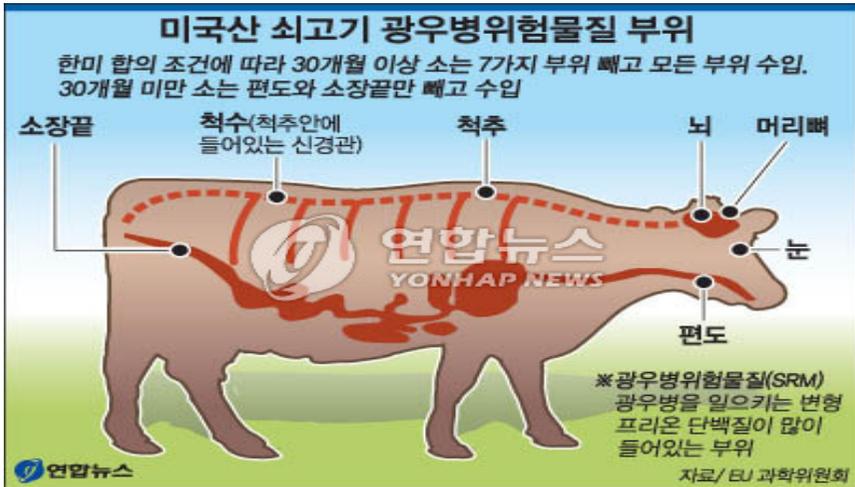
2003년 한국이 수입한 쇠고기의 최대 공급자이던 미국은 2003년 12월 광우병 발생으로 물량으로는 약 20만 톤, 금액으로는 8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잃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재개한다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돼새김동물. 위가 4~5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위를 이용하여 먹이를 소화한다. 소과, 사슴과, 낙타과, 기린과 등의 많은 초식동물이 포함된다.

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차 오염⁴⁾의 위험이 높다. 국내에는 250만 두 가량의 소가 있는데 2006년에 그 중 6,016두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0.24%이다. 전수 검사를 시행하는 일본에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0.1%를 검사하는 미국보다는 나은 것일까? 문제는 검사한 소의 90% 이상이 정상 도축된 건강한 소라는데 있다. 축산 농가들이 의심이 가는 소나 폐사 한 소에 대한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건강한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것이다. 정부는 광우병 검사를 실질화하기 위한 계획 대신에 폐사 한 소를 신고하면 30만원을 준다는 사탕발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정부도 광우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농림부는 2006년에 국제수역사무국에 광우병 등급 신청을 하려다가 신청 직전에 포기하였다. 등급판정을 신청했다가 미국과 같은 2등급(광우병 위험 통제국가)을 받을 경우를 우려한 것이다. 한국의 광우병 위험 수준이 미국과 같은 정도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려워 협상에 치명적이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2005년 5월에 등급 판정 기준 중의 하나를 '광우병 검사 마리수'에서 '광우병 고위험 군에 대한 검사이나, 정상 도축소에 대한 검사이나'로 변경했다. 한국과 같은 광우병 관리체계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한국은 3등급인 미결정 위험국이다.

4) 미국과 한국에서는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돼지, 닭의 내장과 뼈, 고기로 만든 사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또 돼지와 닭에게 반추동물의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교차오염은 우선 반추동물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경우에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돼지, 닭의 사료를 소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고, 사료 생산과정이나 축산 과정에서 반추동물 육골분 사료가 다른 사료에 미량이라도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차오염은 광우병과 유사한 질병에 걸린 가축(이 가축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육골분 사료를 먹었을 것이다)을 사료로 만들어 소에게 먹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원인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육골분 사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도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다. 미국뿐 아니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모두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다.



20080529 / 반종빈 기자 bjb@yna.co.kr

<그림 3>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

광우병위험물질(SRM)로 알려져 있는 일곱 가지 부위가 위험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각 기관이 연결되어 있어 정확히 제거하기 어렵고, 어디까지 위험한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살코기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검출된 사례도 있다. 30개월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영국에서 20개월령 소의 뇌에서 프리온 단백질을 발견하였으며, 일본에서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프리온 단백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근거로 제출하였다.

3. 곡물가격 폭등의 진실

○ 현황

2008년 3월을 기준으로 1년 만에 옥수수 가격이 30%, 대두 가격이 93%, 밀 가격은 146% 인상되었다. 또 4월에 들어서는 세계 인구 절반의 주식인 쌀 가격이 폭등하여 올해만 100% 이상 인상되었다. 생계비 중 식품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이집트, 카메론, 멕시코, 필리핀 등 세계 34개국에서 식량 봉기가 발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37개국을 식량 긴급 위기국으로 분류했다. 아이티에서는 식량 문제로 격화된 시위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베세력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

기금(IMF)은 4월 13일에 끝난 연차회의에서 긴급구호 자금 출연과 새로운 농업 개발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세계 식량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반기문 총장도 4월 20일 유엔무역개발회의 회개회식에서 식량폭동이 세계안보를 위협한다며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국제무역을 왜곡하고 식량부족 사태를 심화”시키는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자리에서 해외 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LG, 현대의 경제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곡물 가격 폭동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언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⁵⁾. 하지만 개연성 있는 요소들을 나열하는 원인 진단은 천편일률적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여러 보고서가 결론에서 주장하는 대안도 거의 똑같다. 첫째, 식량자급률 제고방안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국제선물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해외 곡물기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현상에 주목한 임기응변으로 매우 편협하고,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 수요증가

곡물가격 폭동의 원인으로 흔히 세 가지가 꼽힌다. 수요 증가, 바이오 연료 개발, 상품 투기. 중국과 인도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육식과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곡물 사료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진단이 있다. 우리는 현상과 원인을 구별해야한다. 중국과 인도가 지목되는 수요 증가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인구나 인구 성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산업화된 가축 사육은 풀이 아니라 곡물을 먹여서 고기를 생산한다. 돼지고기 1kg을 위해서는 3kg의 곡물이 필요하고, 쇠고기 1kg을 위해서는 8kg의 곡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제 발전으로 곡류와 채소 중심의 고유한 먹거리 문화가 파괴되고, 육식을 선호하는 서구형 자

5) 「애그플레이션 시대의 식량안보」(2.18, 삼성경제연구원), 「식량안보체제 확립이 시급하다」(3.14, 현대경제연구원),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과 전망」(4.16, LG경제연구원), 「애그플레이션 동향 및 전망과 대응방안」(200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주의 먹거리 문화가 확산되자 육식의 소비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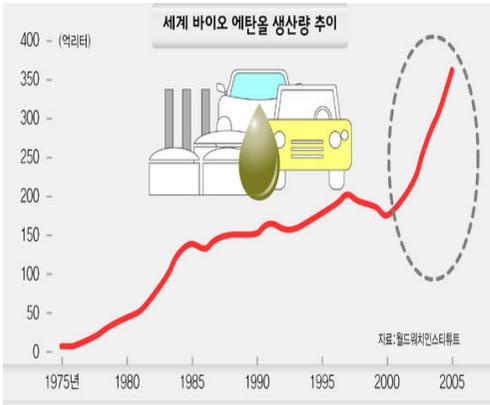
이에 대해서 중국과 인도의 육식 소비 증가를 우려하는 것은 자동차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여서 중국에 자동차가 보급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같은 사고이다. 개발도상국의 자동차 보급을 막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동수송 체계를 전 세계 인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태적인 체계로 변혁하는 것이 과제이다. 육식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평에서 생각해야한다. 자본주의 농업의 모순을 변혁하는 과정에서, 식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지,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실제로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는 20년 전 20kg에서 현재 50kg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미국은 1인당 육류 소비가 120kg이 넘는다(참고로 한국은 34kg).

육식을 강요하고 확산하는 것은 서구 자본주의의 문화임과 동시에 해당 산업과 국가가 광고와 무역을 통해 강제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한국 전쟁 후 분식과 육식을 조장한 원조와 미 공보원의 '근대화 사업'. 또 최근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쇠고기 수입 시장을 재개방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과, 그에 동반되는 여론전이었던 쇠고기 가격 논쟁이나 쇠고기 먹을 권리 논쟁을 누가 주도했는지 생각해보라).

실제로 육식 문화의 확산은 비단 인도와 중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제시되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인구 및 육식 소비 통계로 한두 국가를 특정하여 '걱정과 두려움'을 쏟아내는 것은 이데올로기 공세다. 또 다른 차원에서 육식을 문화나 문명의 문제로 등치하고, 개인의 반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관계를 '자연적인 인구의 문제'로 오도하는 맬서스주의의 오류가 중국(과 인도)에 대한 공포로 반복되는 것이다.

○ 바이오 연료

세계 곡물 소비 중 5%를 차지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이 증가하는 것도 곡물 부족을 부채질한다. 바이오 연료가 지구온난화의 대책으로 제시되면서 미국과 브라질을 필두로 바이오 연료 연구와 생산이 각광받고 있다. 2007년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의 20%가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소비되었고, 2008년에는 25%에 이를 것



<그림 4> 세계 바이오 연료 생산량 추이
2000년 이후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해 5년 만에 두 배가 되었다.

이다. 2007년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10년 내에 350억 갤런의 바이오 연료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70억 갤런보다 다섯 배 많은 것이다(그러나 미국 옥수수 수확량의 전부를 연료로 전환해도 휘발유 수요의 12%밖에 충족하지 못한다). 미국이 이렇게 바이오 연료에 주목하는 데는 초민족 자본의 로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80년대부터 바이오 연료 사업에 착수한 ADM(세계 2위의

곡물자본)은 바이오 연료 정책의 가장 큰 후원자이다.

그러나 연료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개간과 영농에 석유와 화학비료가 다량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다. 소량 감소를 예상하는 연구가 있으나, 오히려 탄소 배출이 대폭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결국 석유로 농사를 짓고, 농작물로 다시 석유를 만드는 꼴인데 그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것은 바이오 연료를 가공하고 판매하는 소수의 자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빈민에게 돌아간다. 자동차에 바이오 연료 100리터를 채우기 위해서 250kg가량의 옥수수가 필요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 1년 동안 옥수수만 먹고 살 수 있는 양이다. 자동차가 옥수수를 먹고, 가난한 사람은 굶고, 이윤은 자본이 챙긴다. 상황이 이러니 OECD와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같은 기구도 바이오 연료가 기대효과는 미미하고 세계 식량공급에 악영향만 끼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8년 세계 식량 생산과 소비

2006년부터 세계 곡물의 생산보다 소비가 많았고, 올해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곡물 비축량이 있기 때문에 그해 생산되는 양보다 소비되는 양이 많을 수 있다. 올해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약 20억8천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사람이 먹는 것은 절반인 10억 톤밖에 안 된다. 나머지 10억8천만 톤 중에 7억6천만 톤이 동물 사료로 사용되고, 2억2천만 톤이 공업용, 나머지 1억 톤이 바이오 연료용이다. 올해 곡물 부족분이 약 5천만 톤인데 사료와 공업용·연료용으로 소비되는 것이 20배가 넘는다. 곡물의 생산과 소비 구조가 인간의 필요보다는 이윤 획득에 종속되니, 사람이 먹는 양보다 가축과 기계가 소비하는 양이 더 많다.

“오늘날 전세계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3,500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곡물을 생산한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을 비만하게 만들고도 남을 정도이다. 게다가 이 추정치는 채소, 콩, 견과류, 뿌리작물, 과일, 초식 가축과 생선 같은 다른 식량자원을 합산하지 않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한 사람이 매일 적어도 2kg의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곡물·콩·견과류 1.1kg, 과일·채소 0.45kg, 육류·우유·계란 0.45kg이 포함된다.”

『굶주리는 세계』, 프랜시스 라페 외(2003), 창비.

○ 곡물 투기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투기가 불안하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 투기에 자본이 몰리는 것도 곡물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다. 전통적으로는 곡물상들이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면, 지금은 금융 기법의 발달로 기관투자자나 연기금이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곡물뿐만 아니라 원유, 구리, 철, 금 등 국제 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편 농업에 필요한 석유와 화학비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원유 등 다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농업 생산비도 상승한다. 또 곡물은 생산량 조절이 어렵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나 공급의 작은 변동도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카자흐스탄 농무부 장관이 수출하는 밀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자 하루 만에 국제 밀 가격이 22%나 급등했다.

○ 식량 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민중

식량 위기, 곡물가격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 여전히 8억 5천만 명 이상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2달러 이하로 살고 있는 극빈층은 가계 수입의 50~80%를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물가격 상승은 생존의 문제이다. 더군다나 비용 상승으로 국제 구호기구의 활동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심각해진다.

가격 상승의 혜택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예상치 못한 가격 인상으로 2007년 미국 농가의 수입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인 수익 구조는 악화될 것이다. 영농에 필요한 트랙터와 경운기는 석유로 움직이고, 비료와 농약도 석유가 주원료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런 비용이 덩달아 오르면 대출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던 농민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된다. 사료 가격 때문에 파산하거나, 사육을 포기하는 돼지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4. 자본주의 농업과 신자유주의

○ 영농과 농식품 체계

농업은 에너지, 기초 자원과 함께 인류의 문명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류가 정착생활을 한 이래 모든 사회의 근간이다. 그런데 농업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자본주의와 함께 획기적으로 변했다. 먼저 자본주의에서 농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영농(farming)과 농식품 체계(agro-food system)를 구별해보자.⁶⁾ 영농은 종자, 비료, 물, 농약과 같은 투입물을 토지, 농기계, 농민의 노동력 등을 이용하여 일차 농업생산물로 전환하는 자연의 물리적 과정이자 농민의 노동과정이다.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자본-임노동 관계가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소생산자로서의 농민층이 농업부르주아지와 농업프롤레타리아로 분화되고,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농민이 비농업부문 임금노동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농민층 분해론은 분해의 구체적인 경로와 소농의

6) 자본주의 농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르윈틴, 「자본주의적 농업의 성숙」, 『사회운동』 2005년 6월호; 맥마이클, 「세계의 식량정치」, 『이윤에 굶주린 자들』, 울릭; 윤종희·박상현, 「마르크스와 생태론」,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 공감

존속 여부, 또 노농 동맹의 정치적·실천적 문제와 결부되면서 광범위한 논쟁거리였다(이른바 농업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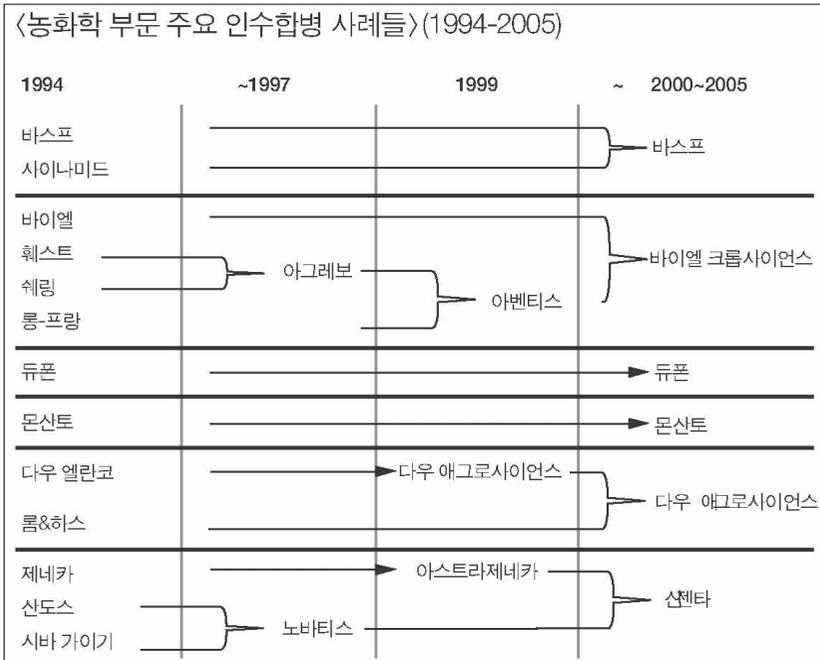
하지만 영농에 자본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많은 소농이 가족농이라는 형태로 농업 생산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본이 영농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①현금 유동성이 작은 농지를 직접 소유할 유인이 없고, ②분산되고, 일률화하기 어려운 영농 과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③일정 규모 이상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고, ④기후나 해충과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기 어렵고, ⑤자연의 주기에 맞춰져있는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주기를 단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에 따라 자본이 농업 생산과 소비 과정의 다른 부분을 통제함으로써 농업에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농식품 체계 개념이 유용하다.

농식품 체계는 영농뿐만 농업과 관련 생산과 가공, 판매의 전 체계이다.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농업 투입물의 생산·판매와 농업 산출물의 판매·운송·가공·유통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종자와 농기구의 개량이나 개간과 관개의 발전 등 농업 생산 도구와 시설에 대한 인간 사회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왔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으로 자연의 생산 능력과 주기(또는 변덕)에 종속되고, 투입물의 양과 집약정도에 절대적인 한계가 있었다. 자본주의는 농가와 지역 공동체 내에서 수행되던 전체 농·식품 체계의 대부분을 외부 자본의 생산 활동으로 대체하고, 양과 집약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또 최근에는 (식당과 식품가공 등) 소규모 자영업, 소매점과 지역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농산물의 수송, 가공, 판매까지 초민족 자본에 장악되면서 자본에 종속된 농·식품 체계가 생산 영역을 넘어 유통, 소비 부문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농업 생산과 먹거리 소비 전반에 상품화가 도입된 계기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농업 상품화와 녹색혁명

자본주의에서 농업의 조직화 방식을 19세기 영국 헤게모니의 농업 식민주의와 20세기 미국 헤게모니의 농업 산업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 19세기에는 공업과 농

업의 세계적 분업이 체계화되어, 영국이 ‘세계의 공장’을 자임하고 식민지에서 곡물과 원료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한다. 반면 20세기 미국은 공업과 농업을 국내에서 통합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추구한다. 농업 투입물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바탕을 둔 이러한 통합으로 농민은 고유한 영농 지식과 노동과정 통제력을 상실한다(농민의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의 전환). 역사적 계기마다 자본은 농업의 종자, 농기계, 비료, 농약, 저장, 판매 등을 요소요소로 분해하고 각각에 개입하여 산업화했다. 농기계, 비료, 농약은 양차세계대전 후 화학, 군수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의 산물이다. 특히 녹색혁명을 가능하게 한 핵심요소인 질소비료의 생산은 폭탄의 원료인 질산을 합성하는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독가스 제조 설비는 농약 설비 등으로 활용되었다.



<그림 5> 농화학 자본의 인수합병 사례

1990년대 농화학 자본은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신젠타는 농화학 부문 점유율 1위로 세계시장의 19%를 장악하고 있다. 바이엘 크롭사이언스는 2위(14%), 몬산토는 3위(11%), 비스프 4위(10%), 다우 애그로사이언스 5위(10%), 듀폰 6위(6%)다. 6개 기업이 세계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의 11대 종자회사의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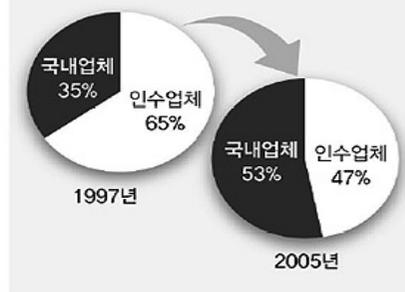
순위	회사(나라)	매출액(백만달러)	
		2002	2004
1위	몬산토(미국)	1,600	2,803
2위	파이오니어/듀폰(미국)	2,000	2,600
3위	신젠타(스위스)	937	1,239
4위	리마그랭 그룹(프랑스)	433	1,044
5위	KWS AG(독일)	391	622
6위	랜드 오레이크(미국)	-	538
7위	사카다(일본)	376	416
8위	바이에르 크롭 사이언스(독일) (Bayer Crop Science)	250	387
9위	다키아(일본)	-	366
10위	DLF-Trifolium(덴마크)	-	320
11위	델타 & 파인 랜드(미국)	258	315

※ 몬산토(미국)는 제1의 채소종자업체 세미니스(네덜란드) 인수, 듀폰(미국)은 거대화회사, 신젠타(스위스)는 노바티스(제약회사)가 대주주
 자료 : 국제농촌진흥재단(ETC GROUP; www.etcgroup.org)

세계 종자 시장 성장 추이



국내 외국계 기업과 토종 기업의 시장 점유율



<그림 6> 세계 종자 시장과 초민족 농업자본의 지배

몬산토와 파이오니어/듀폰은 세계 종자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2002년 4월 두 기업은 농업관련 핵심 특허기술과 종자원형질을 공유하기로 발표했다. 몬산토는 연구개발 예산의 80%를 생명공학에 집중하고 있고, 종자 부문이 농화학 부문 매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종자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파이오니어/듀폰은 2003년 43종의 신품종 옥수수를 출시했는데 28종이 유전자조작품종이었다. 초민족 종자기업은 IMF 이후 국내 종자업체를 대거 사들였다. 국내 채소종자 시장 점유율 1위(32%)인 세미니스 코리아는 몬산토가 소유하고 있다. 3위(8%)인 신젠타종묘는 제약/생명공학 기업 노바티스의 농업사업 자회사 신젠타 소유다. 한국은 식량작물(곡물 등)의 품종보호권은 대부분 국가소유(94%)이고, 채소작물의 경우는 기업을 포함한 민간소유(75%)가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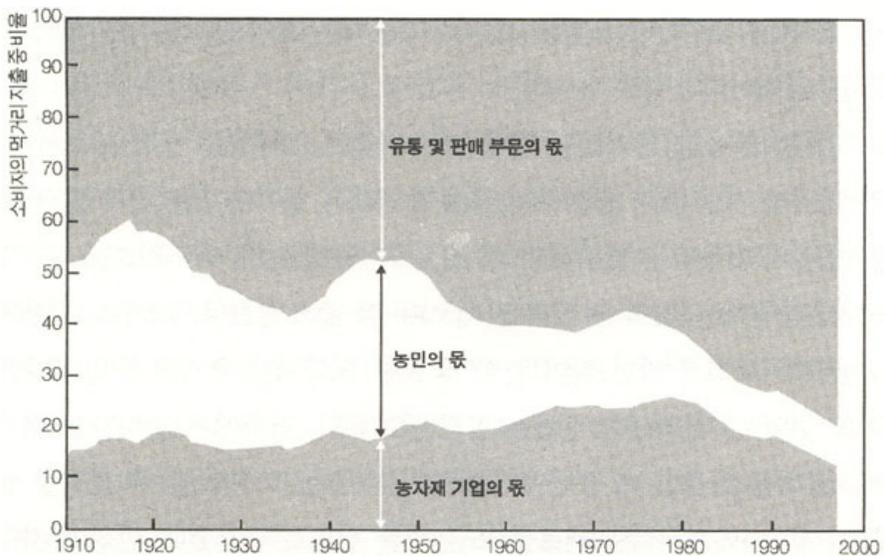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포섭은 농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 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종자는 씨앗(원료)이자 수확물(상품)로 수확한 먹거리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이다. 그러나 수확물을 다음번 재배 때 씨앗으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종자의 관리와 개량은 전통적인 농민의 지식과 자원으로 전승되었기 때문에 자본이 개입하고 상품화하기 어려웠다. 자본은 20세기 전반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종자를 산업화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과학기술과 제도 변화를 통해 자연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본의 노력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19세기 말 멘델 유전학의 발달로 식물 육종의 주도권이 농민에서 과학자로 넘어갔다. 가장 탁월한 사례는 교배종 옥수수 종자의 개발이다. 동일 계열의 종자를 교차 교배해 생산한 교배종 옥수수 종자는 다음 세대에는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동일한 생산량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은 매년 교배종 옥수수 종자를 구입해야만 한다. 교배종자로 자연의 장벽을 부수었지만, 정부가 종자를 자유재이자 공공재로 취급하여 무상 종자를 배포하고 식물 품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자 기업은 로비를 통해 이데올로기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해나갔다. 1920년 미국정부는 무상 종자보급을 중단하고, 1930년 최초로 식물 품종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술인 집단개량을 통한 방임수분 품종은 상품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된다.

종자와 농업 투입물의 상품화를 토대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비료와 농약 생산 시설을 대규모로 확충한 농업 자본은, 전후 자본주의 세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식량 뉴딜 정책을 펼친 미 정부와 협력하여 30년간 획기적인 농업 생산량의 증대를 이룬다. 이 녹색혁명으로 자본의 생산성이 자연의 생산성을 대체한다. 또 단일종자 경작이 세계적으로 확대된다. 미국 자본주의의 헤게모니와 궤를 같이하는 녹색혁명은 화학투입물과 개량된 종자를 핵심적인 생산수단으로 하여 농민의 노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농업노동을 실질적으로 포섭한다. 농민은 투입·산출물과 관련된 외부의 자원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영농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사실상 산업 프롤레타리아와 동일한 위치로 전락한다.

최근에는 종자 부문, 농화학 부문, 곡물무역 부문 각각에서 수평적으로 통합되던 농업 자본의 수직적 통합과 제휴가 늘고 있다. 농화학기업과 종자기업이 통합하

고(몬산토, 신젠타, 듀퐁 등), 가공무역기업까지 연합했다(몬산토와 카길의 제휴). 농업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초민족 자본의 일괄적 지배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농업자본 외에도 가공과 유통, 판매 부문이 대자본(월마트, 네슬레, 맥도날드 등)에 장악되어 '양질의, 표준적인 상품' 생산이 강요되고, 농민의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는 더 강해진다. 그러나 자본이 장악한 전체 체계 속에서 위험이 높은 영농을 담당하는 농민의 수입과 지위는 더 악화된다. 우리가 농산물에 지불하는 돈 1달러 중에 농민의 몫을 뜻하는 '푸드달러'는 미국에서 1910년에 40센트 이상이던 것이 현재 7센트밖에 안 된다. 반면 농업 투입물 자본의 몫이 20센트, 포장·유통 및 판매 부문의 몫이 70센트를 상회한다. (그림 참조.)



<그림 7> 미국 푸드달러의 추이

농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꾸준히 감소되었다.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지한 1935년 농업법으로 농민의 몫이 증가하다가 녹색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차 세계대전 후 다시 감소한다. 1970년대에 수출정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농·식품 자본의 수평적, 수직적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했다.

유전자조작농산물(GMO) 유전자 지배를 통한 농업 지배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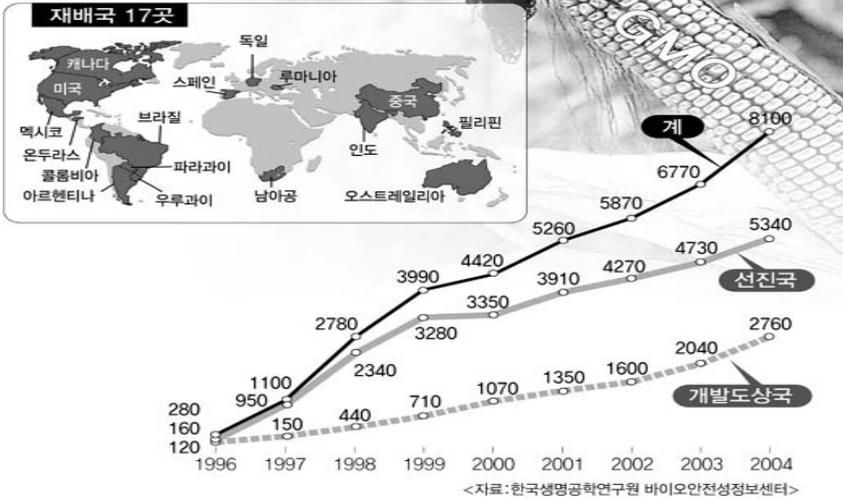
현재의 “바이오혁명”은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디옥시리보핵산(DNA)의 나선형 구조를 확인하는 데 성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근의 생명공학 기술은 작물 육종 기술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자연을 재구성할 수 있다. 육종은 종 사이의 경계를 넘을 수 없지만 생명공학은 모든 종의 경계와 더 나아가 동물/식물/미생물/인간 사이의 장벽을 자유롭게 뛰어넘어 모든 유전자를 잠재적인 자원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육종학과 최근의 생명공학은 엄청난 간극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공학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20세기를 걸쳐 자본-자연 관계를 움직여왔던 과정과 흡사하다. 터미네이터 종자는 아마도 이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다. 이 종자는 교배종 종자보다 훨씬 더 고도로 불임이 되도록 조작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음 피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종자를 사지 않을 수 없도록 생물학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다. 이는 100년 전에 미국 중자기업의 상품 개발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의 산업화 과정, 그리고 자연이라는 장애물에 대한 농업 자본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유전자조작농산물은 녹색혁명을 진전시킨 것이다.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최초로 상품화된 1996년 이래 생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4년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재배되는 면적이 전체 경작지의 5%에 달한다. 국가별로 미국이 전체 유전자조작농산물 재배의 59%를 차지하고 아르헨티나(20%), 캐나다(6%), 브라질(6%) 순이다. 기존의 농업수출국이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생산국이다. 작물별로는 대두(60%), 옥수수(23%), 면화(11%) 순이다. 동일 작물 중 유전자조작 작물의 비율은 대두(53%), 옥수수(14%), 면화(28%)다. 특성별로는 제초제 내성 작물이 72%, 해충 내성 작물이 19%다. 종자와 제초제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몬산토 같은 농업자본의 주요 수익모델이며, 이는 종자기업과 화학기업이 결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업별로 보면 몬산토가 유전자조작농산물 종자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5월 1일 유전자조작 옥수수가 식용으로 대량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논란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이 3%이상 함유된 식품에 대해 표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작위적일뿐더러 유전자조작농산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환원시킨다.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고 먹을 것인가는 공동체와 사회의 문제다. 그리고 그 집단적인 선택, 사회의 선택은 자본과 기업의 권리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에 편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전세계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단위: 만ha)



<그림 10> 유전자조작작물 재배면적의 변화

지금까지의 유전자조작작물은 농업 생산자 중심의 1세대 GMO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소비자의 기호와 건강에 초점을 맞춘 2세대, 3세대 GMO 개발이 예상된다. 한국도 조만간 유전자조작 벼가 도입되어 상업적 재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생명공학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유전자조작 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점 6대 기술 가운데 하나로 생명공학 기술을 선정하고, 2004년 한해 약 6,4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한국의 농업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예산 중 생명공학 부문의 비중은 2006년 기준 18%다. 반면 유기농업 연구의 비중은 같은 해 0.7%밖에 안 된다.

○ 식량정치와 농업무역의 자유화

자본주의 농업이 확산되자,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이 아니라 이윤 생산이라는 자본의 논리를 따른다. 따라서 세계적 농식품 체계가 확대, 심화되고 농업도 가격의 비교우위에 따라 국제적인 분업 체계 속에서 재배치된다. (반)주변부는 녹색혁명으로 주곡을 자급하지만, 나머지 곡물(한국은 특히 사료와 밀)과 과일, 육류 등은 미국, 호주 등 일부국가에서 공급한다. 한편 일부 주변부는 커피와 카카오 같은 선진국의 기호식품을 재배한다.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70년대 이후 환금작물 재배가 확대되어 만성적인 기아와 폭력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기후와 역사에 따라 지역에 고유한 먹거리 문화와 농경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파괴되고, 식량의 자급도 불가능해진다. 이제 대부분의 농업이 생산과정에서 석유,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에 의존하고 판매 과정에서는 세계시장에 의존한다.

미국은 대공황 때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1935년 농업조정법으로 국내 농산품 가격을 지지하였는데, 이것이 미국 농산물의 과잉생산을 야기했다. 따라서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1954년 농산물무역개발원조법으로 잉여 농산물을 해외원조로 처분했다. 농산물 원조는 무상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상업 가격으로 유통시켰다. 그 와중에 카길 같은 곡물기업이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미국의 농업 무역 정책은 1970년대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를 계기로 전환된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원조대신 농산물 수출을 장려한 것이다. 1973년 농업법으로 생산제한 조항이 철폐되었다. 수출 지향적으로 탈바꿈한 미국농업은 수출 시장을 겨냥한 농산물(밀, 옥수수, 대두)을 전체 경지의 1/3이상에서 재배했다. 당시 수확량이 감소했던 동구권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확장되었다(1972년 소련의 흉작으로 세계 곡물가가 폭등하고, 미국은 소련에 긴급구호 농산물을 제공했다). 유럽도 미국의 수출농업 모델을 따르고 미국과 경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밀 총수입량에서 제3세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대 약10%에서 1980년대 57%로 상승한다.

1980년대 이후 GATT와 WTO, 최근에는 FTA를 통해서 각국의 농업시장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되었다.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의 농업은 몰락했지만, 세계적인 농업시장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농산물 공급과 소비의 불안정은 더 커졌다. 핵심적인 곡물 생산 지역 한두 곳에서 작황이 나빠거나, 해당 국가의 정책이 변할 경우 그 영향이 세계적이기 때문이다. 집약적인 단종경작과 사육은 특히 기후나 지역생태계의 변화에 민감하고, 해충이나 질병에 취약하다(예를 들어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 기후변화나 생태적 질병 창궐로 위험은 더 높아지고 있다. 수입국은 곡물을 시카고선물시장과 같은 국제시장이나 카길 등의 초민족 자본을 통해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곡물거래 자체가 고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의 대상이 된다. 세계 곡물 시장의 양대 메이저로 꼽히는 카길과 ADM(아처 데니엘스 미들랜드)의 시장점유율은 75%로 추산되며 콘아르라, 루이 드레퓌스, 분게를 포함한 5대 곡물 메이저의 시장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곡물 투기에 상품지수에 연계된 투자신탁인 인덱스펀드 등을 통하여 기관투자자나 연기금도 유입된다.

정권과 자본의 회전문 인사

‘회전문’은 미국 정부와 초민족 농업자본 사이에 회전문이 설치된 것과 같은 인적 교류가 있다는 말이다. 초민족자본의 고위 관료가 미국 정부의 농업 정책담당자가 되고, 또 미국 정부 농업정책 담당자가 초민족자본의 경영자가 되는 구조를 가리킨다.

세계 최대의 곡물자본인 카길의 예를 보자. 대니얼 암스튜트 전 부사장은 198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농업협상에 제출됐던 미국의 ‘예외 없는 관세화 방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미국 협상팀의 농업 대표를 맡았다. 또 그는 2003년부터 이라크 재건사업 농업부문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네스트 마이세 전 사장은 클린턴 정부 대통령 수출자문단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인도의 환경운동가 반디나 시버는 “WTO 협상은 카길 협상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프랭크 심즈 사장은 2001년 미국 농부부 생명과학기술 위원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유전자 조작 식품 재배를 확대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회전문 인사의 또 다른 사례는 2003년 12월부터 한국에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척 램버트 차관보이다. 그의 공식직함은 미국 농무부의 마케팅과 검사 서비스를 담당하는 차관보이다. 2002년 12월, 당시 베네만 농무부 장관은 미국 육우협회 출신을 핵심 참모로 기용했다. 척 램버트 차관보도 미국 육우협회에서 무려 15년이나 타이슨푸드, 카길 등 초민족자본을 위해 일했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그는 미국 농무부와 무역대표부 농업통상자문위원회의 육류산업통상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통상정책 협상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줄기차게 대변해왔다.

한국의 사례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농업 관련 연구를 전담하던 민승규 씨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농수산식품담당 비서관이 되었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희망 있는 한국농업을 위한 제안”(2005.12.14)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새 정권의 정책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이 보고서가 우수 사례로 소개한 ‘해남 참다래 유통 사업단’ 회장이었다. 또 같은 보고서가 제안한 농업과 2, 3차 산업을 결합하는 농업의 1.5차 산업화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채택되었다. 대규모 농식품복합체를 육성해서 농업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안도 주요 정책이다.

5. 대안을 사고하자 : 대안세계화 농민운동과 민중의 식량주권

○ 민중의 식량주권⁷⁾

농업과 먹거리 위기의 대안이 대안세계화 농민운동과 민중의 식량주권에 있음을 강조해야한다. 식량주권을 유엔농업식량기구(FAO)나 정부의 '식량안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에서는 식량안보가 민족주의와 자유무역 이데올로기와 결합된다. 이러한 식량안보는 식량 자급률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다각적인 수입통로를 확보하고 해외 농업기지를 육성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식량 자급률 목표는 쌀 자급을 방어하는 수준이고, 중심축은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에 있다. 그리고 최근 추가된 방안이 해외 식량기지다. 따라서 '식량안보론'에서는 안정적인 자유무역이 핵심적이다. (국제무역을 왜곡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해제하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 또 농업시장 자유화가 불충분 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에 있다).

반면 식량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을 누릴 민중의 권리이다. 식량주권에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권리가 포함되지만, 이러한 권리는 자유무역이나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량주권은 농민 주도의 지역적이고 생태적인 영농과 그 생산물에 대한 민중의 통제를 의미한다. 소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를 먹거리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농산물 수출국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식량안보(food security)라는 개념대신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으로 이를 대신해야 한다. 식량안보는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의 '로마선언'과 '행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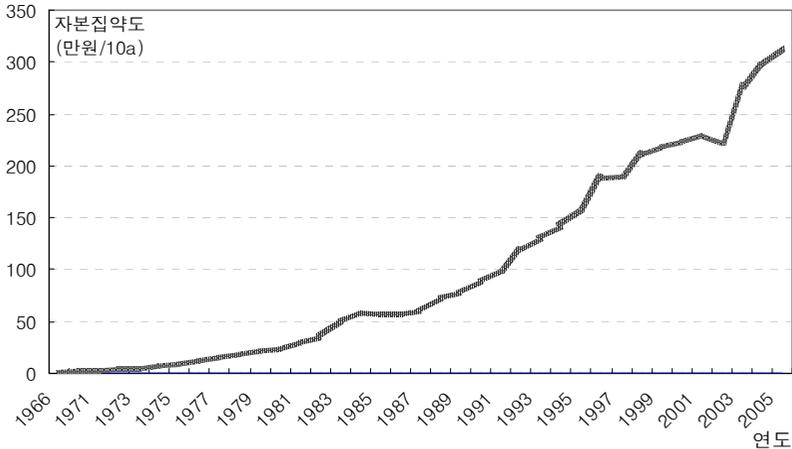
7) 식량주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실린 <2007 식량주권 선언(닐레니 선언)>과 <식량주권포럼 종합보고서>를 참조하라.

확에서 강조된 개념인데, 이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176개국 정상들은 2015년까지 굶주리는 사람들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합의했지만, 오히려 기아인구는 증가했다. 식량안보의 달성수단으로서 식량수입과 재고관리, 국제무역과 더불어 적절한 국내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농산물 수출국과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지렛대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이해를 반영한 개념에 불과하다. 식량안보는 농업관련산업에 의거한 모델이며, 녹색혁명형 농업에 뿌리를 둔 모델일 뿐이다. 식량안보에서는 국민에 대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므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자급이라는 개념은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식량위기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개념으로 되어 버린다.

『식량위기의 원인과 식량주권』, 윤병선, 『녹색평론』 2008년 5-6월호

○ 한국의 농민운동, 먹거리 운동

전국농민회총연맹으로 대표되는 농민 운동은 농가 소득 보장과 농업 개방 반대를 축으로 투쟁해왔다. 농업 구조의 변화와 정책 실패로 농사에 필요한 돈은 늘어나지만 농민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농산물 개방을 막고 민족적인 식량자급 체계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국내 농업도 자본과 에너지를 고투입하는 자본주의 농업 과정에 깊숙이 편입해있다. 또 이미 대부분의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어 쌀과 일부 과채류를 제외하고는 자급 수준이 매우 낮다. 따라서 농업 개방 반대에 초점을 맞춘 투쟁이나, 정부에게 식량 자급을 범제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 농민운동이 계급적인 요구보다는 수입개방 반대를 목적으로 정치적 지향이 상이한 농민·농업 단체 간의 연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다. 지역 차원에서 전농이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과제(물 사유화 반대 등)가 많은데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 농업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식량주권을 운동의 노선으로 체계화하고, 농민 운동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림 14> 한국 농업의 자본집약도 추이(1966-2005)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농업에서도 단위 농지 당 자본투입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0아르(1마지기/300평) 당 자본집약도는 오히려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농림부, 2006, 『농림업 주요통계』)

남미의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와 무토지 농민운동(MST)은 농민의 문제가 자본의 농업 지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대중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상품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태적인 농업을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시혜적인 정부정책이 아니라 토지, 종자, 물, 숲, 식량에 대한 민중의 직접 통제를 주장한다. 또 국제주의와 페미니즘 등을 수용하여 농민 운동에 한정되지 않는 광범위한 시각에서 보편적인 해방을 위한 운동을 지향한다. 이러한 조류를 ‘대안세계화 농민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비아 캄페시나의 사례를 한국의 농민 운동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에 종속된 농업 구조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농민을 보편적인 해방과 변혁 운동의 주체로 만드는데 더 천착해야한다. 농민 운동이 협소한 자기이해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운동과 국제적·전국적·지역적으로 연대한다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변혁의 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운동 속에서 생태적이고 지역적인 농업 체계를 구축하고, 농민 운동으로 농촌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유기농, 생협 운동이나 2000년 이후의 급식조례 운동은 주로 소비 측면에서 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운동을 아우르고 발전시킨 지역 먹거리(Local Food)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먹거리 운동은 세계적인 농·식품 체계의 문제에 주목하여 농민과 소비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와 사회적인 거리를 줄이자는 운동이다. 지역적인 먹거리 생산과 소비 체계를 구축해 농민은 적절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식품을 얻을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좋은 먹거리를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급식조례 운동도 지역 먹거리 운동의 한 사례다. 또 지역 먹거리 운동은 '웰빙'과 유기농이 유행하면서 유기농 제품마저 수입되어 지역적인 생산과정과 괴리된 것을 비판한다.



<그림 10> 유기농가공식품 주원료의 원산지

유기농 제품이라고 해서 국내 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먹거리 운동은 근방에서 생산된 생태적인 먹거리 소비를 추구한다.



<그림 11>유기농 수입현황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웰빙 열풍이 불면서 유기농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역 먹거리 운동의 일각은 정부나 지자체를 통한 제도화를 운동의 주요 의제로 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따라 '지역 먹거리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광역단위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성하자는 것이 주요 안이다. 물론 '지역 먹거리 정책협의회'는 정부에 의해서 주도될 수도 있고, 민간에 의해서 주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지금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것이 정책대안으로 수용되더라도 변혁적 농민운동이나 다른 사회운동과 결합하지 못할 경우 자본주의 농·식품 체계를 유지한 채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수단

에 머물 위험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지역 먹거리도 새로운 '상품'에 머물고 말 것이다. 새로운 소비 양식으로 자본에 종속된 농식품 체계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10여년의 실험을 거친 생협과 유기농이 기업화, 제도화되어 소수의 색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전략한 측면이 있다. 농업생산 구조를 농민 주도로 변혁하고, 유통과 소비 전반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소비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 운동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자본주의의 동학에 대한 맹목을 공유한다면 지역 먹거리 운동도 유사한 길을 걷게 될 위험이 있다. 생협이나 지역 먹거리 운동을 대안적인 미래 사회의 가치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예시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예시적 실천은 그것을 보편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한 과정이다. 따라서 생협과 지역 먹거리 운동의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한 면밀한 인식 속에서, 여러 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광우병 쇠고기 논란과 곡물가격 폭등은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 쟁취와 생태적·지역적 농업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자본주의 농업의 위기를 연기할 수 있는 자본과 정권의 대안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맞서는 운동의 조건이 좋은 것은 아니다. 대안세계화와 식량주권을 이념으로 농민 운동과 먹거리 운동이 발전해야 한다. 또 학생운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운동이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 나아가 생태위기를 구체적인 과제로 사고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럴 때 현재의 농식품 체계를 변혁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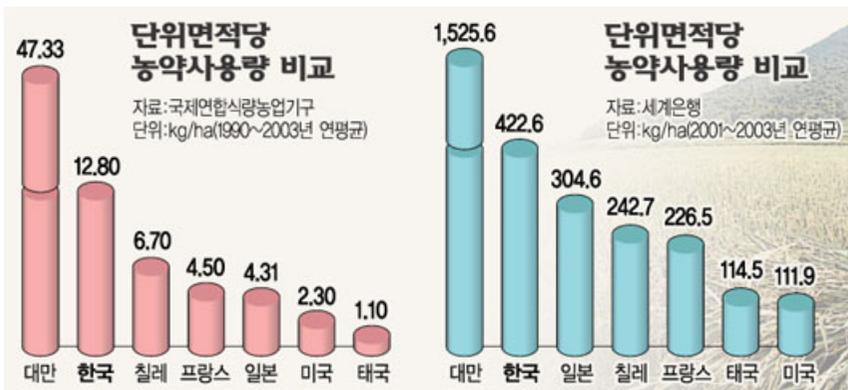
<참고 그림>



<그림 13> 농민과 도시노동자 월 소득 추이
1990년대 초반까지는 농민과 도시노동자의 월 소득이 크게 차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업 시장 개방이 본격화되고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중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그림 12>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농업관련 1,531개 품목 중 쌀 16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 즉시철폐는 아니지만 농업, 농민, 농촌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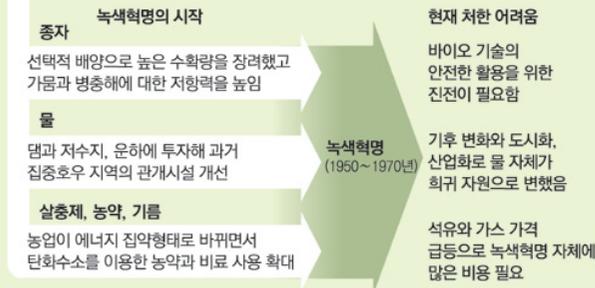
<그림 14> 각국 농지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한국의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미국의 5.5배, 일본의 3배에 이른다. 최근 들어 농약 사용량이 줄었다고나 하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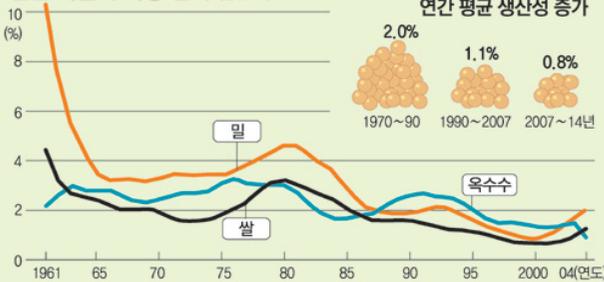


녹색혁명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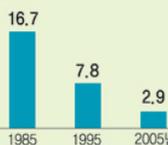
1950년대부터 늘어난 농업분야 투자로 저개발국의 식량생산이 증가했고 인도 등은 식량 자급자족을 이룸.



연간 작물 수확량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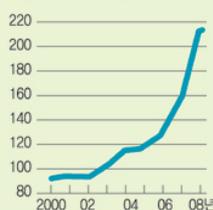
총 공적 개발원조에서 농업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식량 수요 증가 (단위: %)



유엔식량농업기구 가격 지수



자료: 세계은행, 유엔식량농업기구, 파이낸셜타임즈

<그림 15> 녹색혁명과 그 한계

1980년대부터 녹색혁명을 통한 증산이 한계에 달했다. 최근 식량위기를 맞이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FAO)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은 새로운 녹색혁명, 새로운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자본이 지배하는 농·식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자본과 국제기구에는 돈 벌이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 될지 모르지만, 농민과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재앙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림 16> 한국 농경지의 물질순환 구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한국의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미국의 5.5 배, 일본의 3배에 이른다. 축산에 필요한 사료와 비료의 원자재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한다. 해양에 투기되는 가축분뇨 양이 매년 167만 톤에 달한다. 한국 농업 시스템 자체에 거대한 물질대사의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더 읽으면 좋은 것>

- 「자본주의 농업의 성숙」, 『사회운동』 2005년 6월호.
- 『이윤에 굶주린 자들』, 울력, 2006.
-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생태론』, 공감, 2006.
- 『굶주리는 세계』, 창비, 2003.

2007 닐레니 식량주권 선언

-닐레니(Nyeleni) 선언-

2007. 2. 23~27

말리, 셸링게

우리는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세계적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말리 셸링게 닐레니 마을에 모였다. 우리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80여개 나라의 농민·가족농·어민·토착민·무토지농민·농업노동자·이주자·목축농민·삼림공동체·여성·청년·소비자·환경주의자·도시빈민 조직을 대표해서 이곳에 왔다. 우리는 지역 전통에 따라 벽돌을 하나씩 손으로 쌓아 올려 지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셸링게 공동체가 생산하여 마련한 음식을 먹으며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는 직접 농사를 지어 민중을 충분히 먹여 살린 말리의 전설적인 여성 농민을 기리는 의미로 우리의 집단적 노력인 이번 포럼의 명칭을 “닐레니”로 정했다.

우리 대부분은 식량을 생산한다. 그리고 전 세계 민중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능력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 식량 생산자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전통은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역사적으로 식량과 농업에 관한 지식을 창조해왔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과 토착민의 전통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된 자본주의는 이러한 전통과 건강에

좋고 질 좋은 식량을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고 침해한다. 식량주권은 우리의 식량 생산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보전하고, 복원할,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구축될 희망과 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식량주권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어,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다. 또한 스스로 식량과 농업 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민중의 권리다. 식량주권은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식량을 생산·유통·소비하는 이들을 식량체계와 정책의 중심에 놓는다. 동시에 다음 세대의 이익과 참여에 의존한다. 식량주권은 기업 중심의 현재 무역·식량 체계에 저항하고 이를 해체할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생산자들이 결정하는 식량영농·목축어업 체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식량 주권은 지역적·민족적 경제·시장을 우선시하고, 소농·가족농 주도의 농업, 전통 어업, 목축농업,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둔 식량의 생산·유통·소비에 힘을 불어넣는다. 식량 주권은 모든 민중에게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 투명한 무역을 촉진하며, 소비자가 식량과 영양분을 통제할 권리를 촉진한다. 식량주권은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다양성을 이용하고 관리할 권리가 식량을 생산하는 우리의 손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식량주권은 남성, 여성, 민중, 인종 집단, 사회 계급, 세대 사이에 억압과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함의한다.

우리는 닐레니 포럼에서 수많은 논쟁과 대화를 거쳐 식량주권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심화했으며, 각 운동 조직이 자율성을 유지하고 권력을 다시 얻기 위해 전개하는 투쟁의 현실에 대해 배웠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운동을 조직하고 우리의 집단적 전망을 진척시키는데 필요한 수단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싸운다

- 모든 민중, 민족, 국가가 자신의 식량 생산 체계와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질 좋고 충분하며 값싸고 건강에 좋으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세계

- 여성이 식량생산에 차지하는 역할과 모든 의사결정 기구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인정·존중하는 세계

- 각 국의 모든 민중이 존엄하게 살면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생활임금을 획득하며 자신의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세계

- 식량주권이 기본 인권으로 여겨지고 모든 공동체와 민중,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를 인정하고 이행하는 세계

- 우리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 토양, 물, 바다, 종자, 가축 및 여타 생물다양성에 바탕을 두고 농촌환경, 수산자원, 조경,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복구할 수 있는 세계

- 우리의 전통지식·음식·언어·문화의 다양성과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평가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는 세계

- 농민에게 토지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토착민의 영토를 방어하고 회복하며, 어민에게 어장과 생태계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보장하고, 목축농민에게 목초지와 이동경로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정당한 임금과 노동권이 인정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농촌의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진정하고 통합적인 토지개혁이 실행되는 세계, 토지개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의존성을 재활성화하고, 공동체의 생존과 사회적·경제적 정의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갖는 지역적 자율성과 통치를 존중하는 세계, 토지개혁이 모든 민중에게 영토에 대한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세계

- 소농, 토착민, 전통어민, 목축농민 할 것 없이 모두 우리의 토지와 영토를 평화적으로 공유하고

- 우리가 농민이건, 토착민이건, 어민이건, 목축농민이건, 우리의 토지와 영토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공유하는 세계

- 자연재해나 인재, 분쟁 극복의 상황에서 식량주권이 지역적 복구 노력을 강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는 일종의 “보증”으로 작동하는 세계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공

동체가 희망을 유지하고 자조(自助)를 위한 강력한 지역조직이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

- 자신의 물질적·자연적·영적 유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민중의 권리를 방어하는 세계
- 모든 민중이 초민족기업의 행위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방어할 권리를 갖는 세계

○ 우리는 다음에 대항하여 싸운다

-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신-식민주의, 가부장제, 생명·자원·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체계, 이상을 촉진하는 행위자들, 예를 들어 국제금융기관·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 초민족기업, 민중을 적대시하는 정부 등.
- 세계 경제 내에서 생산가격 이하로 이루어지는 식량의 덩핑
- 민중·건강·환경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식량과 식량 생산 체계 지배
- 우리 미래의 식량생산 역량을 저하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기술과 관행. 여기에는 유전자조작 곡물/동물, 불임 종자 기술, 산업적 농업과 파괴적 어업관행, 소위 산업적 낙농(백색혁명), 1·2차 녹색혁명,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적 단종경작(녹색사막) 및 여타 플랜테이션이 포함된다.
- 식량, 기초 공공서비스, 지식, 토지, 물, 종자, 가축, 자연적 유산의 사유화와 상품화
- 강제 이주를 획책하고 자연적 유산을 파괴하는 개발사업/모델, 추출산업
- 전쟁, 분쟁, 점령, 경제적 봉쇄, 기아, 민중의 강제추방과 토지몰수,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정부. 우리의 환경과 역량을 파괴하는 재난/분쟁 후 재건 프로그램
- 우리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범죄화
- 식량 원조로 둔갑한 덩핑, 유전자조작물질을 지역 환경과 식량 체계에 도입하고 새로운 식민주의 유형을 창조하는 식량원조.
- 전 세계의 여성과 다양한 농민·토착민·목축농민·어민 공동체를 주변화하는 온정주의적·가부장적 가치의 국제화와 세계화

○ 우리는 다음을 실천한다

우리가 닐레니에 행사장을 만들기 위해 셀링계의 지역 공동체와 협력했듯이, 우리는 동맹을 구축하고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의 연대와 힘, 창의력을 더욱 넓혀 식량주권에 헌신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과 함께 식량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운동을 건설하는 데 헌신할 것이다. 장소를 불문하고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투쟁은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이들과 식량주권에 대한 우리의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집단적 행동을 실행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이 선언문에 담았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각자의 지역과 대륙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운동과 연대하여 실행에 옮길 것이다. 우리는 식량주권에 대한 우리의 전망과 행동 계획을 이번 닐레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이들과 공유할 것이며, 이를 통해 닐레니의 정신이 전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식량주권을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누리는 현실로 만들 강력한 힘이 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식량주권이 말리와 아프리카 전체에서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말리의 농민운동과 <서아프리카 소농·농업생산자 조직 네트워크>(POPPA)에 조건 없고 흔들림 없는 우리의 지지를 표명한다. **이제 식량주권을 실현할 때다!**

번역: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Nyeléni 2007 - Forum for Food Sovereignty. 23rd - 27th February 2007. Sélingué, Mali

닐레니는 말리 셀링게에서 열린 식량주권 포럼의 이름에 영감을 주었다. 닐레니는 전설적인 말리의 여성 농민이다. 그녀는 농사를 지어 그녀의 인민들을 먹여 살렸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혁신적으로 농사를 짓고, 인민들을 돌봄으로써 식량주권을 구체화했다. 닐레니 2007에 모인 우리 농민, 목축농민, 어민, 토착민, 이주노동자, 여성, 청년들은 전 세계 민중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능력과 의지를 지니고 있다. 식량 생산자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전통은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역사적으로 식량과 농업에 관한 지식을 창조해왔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과 토착민의 전통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건강하고, 좋고, 풍족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유산과 우리의 능력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① 집단적인 이해를 높이고, ② 다양한 부문, 이해집단들과 대화를 강화하고, ③ 공동의 전략과 행동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식량주권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을 통해 말리, 아프리카, 전 세계 식량공급자, 환경주의자, 소비자, 도시운동은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적 식량 체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의 지식을 보전·회복·건설할 수 있다. 식량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문화와 민중과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킬 것이다.

식량주권은 시장과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사람들과 건전한 지역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식량·농업·축산·어업 체계와 정책의 중심

에 둔다. 시장과 기업은 식량을 국제적인 무역 상품이나 그 요소로 전락시킨다. 식량 주권은 만성적인 영양부족과 비만의 급격한 증가를 발생시키는 불공정하고 지속불가능한 체계를 바로잡고 저항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식량주권은 식량에 대한 권리, 사회적으로 정당하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포함한다. 식량주권은 자신의 식량, 농업, 축산, 어업 체계를 정의하고 만드는데 참여할 민중의 권리를 수반한다. 식량주권은 남/여, 인민들, 종족집단, 사회계급 사이의 억압과 불평등이 없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지지하고 미래세대의 이해와 참여에 의존한다. 식량주권은 진정한 토지 개혁을 장려하고, 사유화와 배제의 위협이 없는 생산적인 토지에 대한 분배와 접근을 방어한다. 식량주권은 식량과 식량생산에 대한 민중과 공동체(점령 하에 있는, 분쟁지역에 있는, 재난에 직면한/또는 복구중인 그리고 달리트, 토착민,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을 포함하여)의 이해와 권리를 방어한다. 식량주권은 지역 공동체가 결정하는 식량, 농업, 축산, 어업, 기타 식량 생산과 수확, 채집 체계에 대한 정책 틀을 제공한다.

닐레니 2007에서 우리는 식량주권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인 이해를 심화시켰다

● 식량주권은 민중을 위한 식량을 주목한다

식량주권은 충분하고,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굶주리고, 점령 하에 있고, 분쟁지역에 있고, 주변화된) 모든 개인·민중·공동체의 권리를 식량 농업·축산·어업 정책의 중심에 둔다. 그리고 국제 농업기업을 위한 다른 공동체나 행위자들의 식량에 대한 간섭을 거부한다.

❶ 식량주권은 공급자의 가치를 인정한다

식량주권은 기여자들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식량을 재배·사육·수확·가공하는 여성과 남성, 농민과 소규모 가족농, 목축농민, 전통어민, 숲 거주자, 토착민,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농·어업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 그 권리를 폄하하고 제거하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행동·계획을 거부한다.

❷ 식량주권은 식량 체계를 지역화한다

식량주권은 식량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킨다. 공급자와 소비자는 식량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다. 지역 시장의 덤핑식량과 원조식량으로부터 식량 공급자를 보호한다. 낮은 질, 비위생적인 식량, 부적절한 식량원조, 유전자조작물질(GMO)에 오염된 식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지속불가능하고 불공정한 국제무역을 조장하고 의존하는, 또 원거리에 있는 무책임한 기업에 권력을 주는 지배 구조·조약·관행에 저항한다.

❸ 식량주권은 통제권을 지역 식량 공급자에게 준다

식량주권은 영토, 토지, 목초지, 물, 씨앗, 가축과 물고기 개체군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 식량 공급자에게 주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들은 통제권을 다양성을 보존하는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 식량주권은 지역 영토들이 종종 지정학적 경계를 가로지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영토에 거주하고 사용할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식량주권은 내부 분쟁이나 지역정부나 중앙정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로 다른 부문에서 온 다른 지역과 영토의 식량 제공자들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권장한다. 식량주권은 법, 상업적인 계약, 지적재산권 체제를 이용한 자연자원의 사유화를 거부한다.

❹ 식량주권은 지식과 기술을 형성한다

식량주권은 지역적 식량 생산과 수확 체계를 보존·개발·관리하는 식량 제공자와 그들 지역조직의 지식과 기술을 만들고, 이것을 지원하고 이 지혜를 미래 세대에 계 전승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 체계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식량주권은 유전자 기술과 같이 이를 파괴·위협·오염시키는 기술을 거부한다.

● 식량주권은 자연과 함께 작동한다

식량주권은 다양한 자연 산물의 생태계 기여를 극대화하고 (특히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복원력과 적응력을 증진시키는 외부 저투입 농업생태적 생산과 수확 방법을 이용한다. 식량주권은 지구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지구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주권은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에너지 고투입 단종경작, 가축 공장, 파괴적인 어업관행, 기타 산업화된 생산방식에 의존하여 생태계의 유익한 기능에 해를 끼치는 방법을 거부한다.

식량주권에 관한 주제별 토론

닐레니 2007에서 우리는 각 부문과 이해집단 사이의 대화를 강화했다. 포럼의 주요 행사에서 식량주권과 관련된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지역 시장과 국제 무역, 지역 지식과 기술,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 영토 공유(분배), 분쟁·점령·재해, 사회적 환경과 강제 이민, 생산모델이 토론된 주제다.

이 토론과 각 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는 닐레니 행사책자와 닐레니 2007 홈페이지에 있는 “식량주권을 위한 행동 의제”에 있다.

http://www.nyeleni2007.org/IMG/pdf/TOWARDS_A_FOOD_SOVEREIGNTY_ACTION_AGENDAII.pdf

아래에서는 각 주제별 워킹그룹의 토론을 요약하여 종합한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각 부문, 이해집단, 지역들이 토론한 <식량주권 행동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 행동 의제는 닐레니 2007에 참석했던 농민, 목축농민, 어민, 토착민, 이주노동자,

소비자, 도시운동, 여성, 환경주의자, 청년 조직에 의해서 공동행동으로 요약되었다. 또한 각 지역과 부문에 의해 동의된 구체적인 행동 사례들도 포함되었다. 토론의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는 더 긴 보충 보고서에서 제시될 것이다.

1. 지역 시장과 국제 무역

식량은 민중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교역 상품일 수 없다. 모든 사람과 농민, 목축농민, 어민, 건강에 좋은 식량을 지속가능하게 생산하는 다른 사람들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한 무역과 가격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해야만 한다. 그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제 아래에 있고, 식량 사슬의 모든 단계가 투명하며 지역 시장을 위한 지역 생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우리는 농업, 어업, 식량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를 위해 싸워야만 한다. 그럴 때 정책이 정부, 초민족기업, 세계은행(WB)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 등의 신자유주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조장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식량주권에 기초를 둘 수 있다. 우리는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양자간, 다자간 협정을 계속 거부할 것이다. 식량주권은 국제적·지역적·국가적 무역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 시장을 위한 지역 생산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식량주권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생산에 가치를 부여하여, 민중이 유전자조작식품 따위의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소비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다.

지역시장은 또한 바이오연료나 다른 단종경작을 위한 생산보다는 식량생산을 위한 토지 이용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파괴적인 어업보다는 지역 어업을 위한 연안 해양 자원, 지속가능한 가축 유지를 위한 목축 방목지 등등. 우리는 거대한 기업생산자에게 이득이 되고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과잉생산, “싼 식량”을 덩핑, 불필요한 원조식량 수입을 조장하는 자유무역과 다른 시장 메커니즘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는 식량생산과 소비의 지역 자율성을 증진하는 법과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 법과 정책으로 토착민, 농민, 어민, 목축농민, 숲 거주민, 기타 지역 식량 공급자들은 자신들과 지역 공동체, 더 넓은 사회를 위해 생산할 수 있다.

2. 지역 지식과 기술

세계 식량의 대부분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지역공동체에서 지역 지식에 기초를 두고 지역 기술과 지역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되고 수확된다. 식량주권을 쟁취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과 지혜다. 우리 여성과 남성, 농민, 목축농민, 전통어민, 토착민, 숲 거주민은 수천 년간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의 생존을 위한 토대를 창조·유지·발전시킨 사람들이다. 그 토대에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존중하는 식량, 의복, 의술, 씨앗, 가축 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포함된다. 우리의 지식은 살아있고, 그 자체가 여러 방법을 보여주고 식량주권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것은 지역적·집단적이고 다양하며 계속해서 변화하고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 그것이 모이면 교환과 연대를 통해서 강화된다. 식량주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통제 아래 지역 식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심적인 요소인 생산 체계, 토착 지식 형성에 여성의 기여와 경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물) 녹색혁명, (양식) 청색혁명, (우유) 백색혁명으로 발생한 식물성연료 생산, 산업적 양식, 파괴적 어업 등 집약적인 단종경작을 위한 기술의 영향은 우리의 지역 지식체계·기술·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쳐왔고, 지금 아프리카에 다시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생산부터 분배까지 식량 사슬 전체에 걸친 초민족기업의 시장 장악과 통합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업의 통제와 지배는 지역 엘리트의 지원을 받았고 토지 집중, 토양 침식, 질산염과 농약에 의한 수질 오염과 생산적인 생태계를 파괴했고, 농민, 목축농민, 어민의 소멸을 극에 달하게 했다. 이 왜곡된 권력은 특허권과 여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새로운 유전자조작물질, 나노기술, 불임종자 기술을 만들었다. 또한 농업 연구의 사유화는 공적으로 소유되던 지식·종자 다양성·가축 품종을 기업의 손으로 넘겨줬다. 따라서 변형적인 지역 지식의 발전은 파괴되었다. 기아, 조류독감, 기후변화, 가뭄을 명분삼아 비용이 많이 들고, 부적합하고, 지속불가능한 기술이 급격히 우리 영토에 강요되어 수계를 오염시키고, 산업적인 추출 어업과 양식의 영향으로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3.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

농민, 목축농민, 전통어민, 숲 거주민, 토착민 공동체가 식량을 얻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자연자원(예를 들어 토지, 숲, 물, 씨앗, 가축, 물고기, 기타 수중생물)에 대한 접근, 통제, 관리는 식량주권에 필수적이다. 여러 세대와 지역 공동체들은 농업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실천, 생물다양성 농업·가축 생산·목축·전통어업·토자영토·숲·수계를 과잉사용·고갈·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절약하면서 이러한 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해 자원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보존해왔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차별 법을 철폐하고,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보장해야만 한다. 토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부인하는 관습을 변화시켜야 한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진정한 토지개혁은 토착민중과 목축농민을 포함하는 우리들이 생태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수계와 해안 공유지에 대한 전통어민들의 유사한 권리를, 산업적인 양식이나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막을 것을, 또한 강가와 해안에 대한 자원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반드시 초민족적기업에 의한 지표수 개발, 물 사유화와 상품화에 대항해서 싸우는 공동의 행동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식량주권의 기초인 종자 다양성, 가축 품종, 물고기 종에 접근하고 통제하는 것을 지적재산권과 타협하면 안 되고, 그것들이 유전자조작물질에 오염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자연자원에 대한 우리의 접근과 통제를 약화시키는, 예를 들어 2004년 12월 인도양 쓰나미 이후 발생한, 인도주의적 개발 원조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존의 국제법이나 조약을 적용하거나 국내법을 제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해야만 한다. 그 법은 민중이 권리를 부여받고, 공유자원의 사유화와 초민족기업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 또 우리가 필요한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자원에 대한 우리의 접근권을 통제해야 한다.

4. 영토 공유

우리는 먼저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서는 토착민들의 영토, 유목민과 목축농민 공

동체, 해안에 거주하는 어민을 포함하는 영토들에 대한 정의를 해야만 한다. 우리는 자연을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 물질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영토를 토지-물-종자-가축-해양 생물을 포함하는 자연 전체로 이해한다. 영토를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와 민중들은 [해당 영토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영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의 최대 장애물은 토지-물-광물에 대한 사유화다. 우리는 민중을 영토에서 배제하는 모든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또 영토에 대한 원거리 통제, 기업 통제, 중앙 집중화된 통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영토를 민주적으로 협상하여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을 강화하고 여러 부문 간 연대를 강화해서 영토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해야 한다. 강력하고, 깨어있고, 조직화된 시민사회는 농민, 전통어민, 목축농민, 토착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영토에 대한 젊은이와 여성들의 접근권을 옹호해야만 한다. 우리가 영토를 공유하고 있는 각기 다른 부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영토에 관한 전통적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분쟁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을 해치면서, 한 세대가 미래 세대를 해치면서 자연을 초과착취하고 영토를 지속불가능하게 관리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만중들의 다양한 필요에 입각한 포괄적이고도 진정한 토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또 정부가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만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전통지식에 뿌리를 두고,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영토 공유(분배) 장벽에 대한 대안적인 해법을 모으고 상상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연구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한 해법 중 하나는 세계시장의 지배에 저항하는 지역 생산자들 끼리 교환하는 대안적인 경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5. 분쟁, 점령, 자연재해

식량주권은 분쟁, 점령, 재해 때문에 위협 받는다. 또 그 자체로 더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식량원조, 개발/복구 계획 등과 같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 때문에 위협 받는다. 또한 전쟁과 재해로 인한 환경 악화는 지역 생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식량주권을 위협한다. 동시에 우리는 식량주권이 존재하는

곳에서 공동체와 그 식량 체계가 [전쟁과 재해 하에서] 더욱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이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런 곳에서 지역의 식량이 기아를 막는다. 점령으로 인해 식량주권을 상실한 파키스탄과 레바논, 자연자원을 놓고 벌어진 분쟁의 결과로서 식량주권을 상실한 카메룬과 콜롬비아,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불안정한 생활 조건 때문에 식량주권을 상실한 스리랑카와 필리핀의 사례를 보자. 이러한 사례들과 다른 여러 이야기들은 분쟁·점령·재해로 큰 영향 받은 지역에서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지역 생산자와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기 원하는 민중들의 시장 접근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분쟁·점령·재해를 겪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접근은 기초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다. 예를 들어 생산자와 시장 사이에 장벽이 있는 곳이나, 또는 홍수로 교통체계가 망가진 곳에서. 또한 분쟁이나 재해 후에 민중은 종종 그들의 토지나 영토를 상실한다. 그곳은 관광이나 다른 이의 전용(점령) 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 전용된다. 식량주권은 억압, 국가의 테러, 특히 영토에 대한 공동체의 통제에 영향을 주는 분쟁 때문에 도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은 토지, 물, 식량에 대한 민중의 접근을 제한하며 의사결정에 민중의 참여를 배제한다.

점령 하에 사는 민중들에게 자기결정과 지역의 자율성은 식량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결정적이다. 또한 자기결정은 생태계의 파국적인 사건에 복원력을 높이는 전통 지식과 생활방식에 의존하는 생태적 공동체 관리를 가능하게 해 자연재해와 인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식량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해/분쟁의 피해자와 생존자가 구호·복구·재건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이 공동체의 복원력과 모든 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다음을 토론했다. 공동체의 살림살이(생계)가 내부적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법적 틀로 이득을 보장할 것인가. 또한 식량주권에 대한 국제협정, 특히 분쟁·점령·재해 속에서 사는 공동체를 위한 식량주권에 대한 국제협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6. 사회적 환경과 강제 이주

우리는 식량주권에 대한 투쟁을 이주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강제 이주의 원인은 국제 금융정책과 개발정책, 전쟁, 사회적·환경적 불의로 인한 거주지와 문화의 파괴 등이다. 강제 이주의 특징은 인종주의, 성적 착취, 인신매매, 이주자의 값싼 노예노동으로의 활용, 이주자의 “이등 시민” 취급 등이다.

2006년 미국과 프랑스에서 벌어진 시위로 이주 노동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고, 가족에게 보내는 이주자의 본국 송금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고향 공동체로 돌아갈, 특히 점령·재난분쟁에 의해 쫓겨났던 이주 민중의 권리를 지지하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강제적 이민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서 강제적 이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한다.

- 1) 농촌과 도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영토, 문화, 식량주권, 자립성, 농촌조직, 농민조직, 농업조직, 도시조직들을 방어한다.
- 2) 농민의 생산의 가치와 자본주의 시장 규칙 외부에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관계를 창조하는 것을 결합한다.

우리는 지역에서부터 국제적인 수준까지 독립적인 이주자 조직과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본국과 이주자가 살고 일하고 있는 조직/사회운동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강제 이민과 이민자들이 직면한 환경, 특히 식량, 어업, 농업 부문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 우리는 이주자 조직과의 연대를 식량주권을 위해 싸우는 주요 연대로 만들어야 한다.

7. 생산모델

식량주권과 환경 안정에 농업생태적 식량생산과 생태적인 전통어업 관행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생산은 사회적 가치와 지원이 있을 때만 계속될 수 있다. 또 초민족기업에 이득이 되는 산업적 생산체계의 지배와 보조금을 제거하고 지역식량을 구매할 때만 계속될 수 있다. 산업적 생산모델은 지역시장, 소규모 식량 공급자의 생계,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을 장악하고 파괴한다. 산업적 모델은 단종경작과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식물성연료 생

산을 위해 식량작물과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산업적 모델은 산업적 어업과 양식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죽인다. 또 기업이 주도하는 생산 모델은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의 적응능력과 생산능력을 파괴하며, 기후변화를 악화시킨다.

산업적 생산모델과 산업적 식량생산 방법은 식량이 팔리고 분배되는 것이 생산규모나 생산 장소보다 더 중요하다. (소규모 식량생산 방법은 대규모 식량생산 방법과 같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 식량주권은 북반구의 산업화된 국가들에도 남반구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그들을 지역농민, 목축농민, 전통어민과 그들의 농업생태적 생산과 수확을 지지하는 '연대 경제'로 변화시키도록 설득해야한다. 또 모든 수준에서 정부가 지역적으로 생산된 식량을 학교, 병원,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다. 현 세대를 위한 도전은 정책을 변화시키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을 선호하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산체계에 필요한 자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자원과 가치는 다음 세대에도 보호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주권 행동 의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닐레니 2007에서 우리의 의제를 추진하고 이를 침해하는 정책과 관행에 저항하고 우리의 운동을 강화하는 행동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동 전략과 행동 의제를 수립했다.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우리는 공동체적 통제, 생태의 지속가능성, 지역적 지식과 자율성, 모든 차원에서 식량주권을 옹호하는 전통적 지식, 우리의 연합적 권리를 강화하는 전략 정책·생활 양식을 **촉진한다**. 우리는 각 국 정부가 식량주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추동하는 것은 물론 식량 주권을 보장하는 현존하는 자율적인 실천을 밝혀내고 강화할 것이다.

① 지역 시장

우리는 식량 주권을 위한 중요한 공간인 지역 시장에 대한 식량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적 통제권을 옹호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공식적·비공식적 시장과 소비자와 식량 공급자의 직거래를 강화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농업과 어업을 지지함으로써 상호 필요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 시장·공정 가격·소규모 생산자에 우호적인 식품 협동조합, 지역 내 가공, 소비자 포럼, 연대의 경제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무역에서의 공정성과 식량 주권에 기여하는 “공정 무역”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사회 기금, 물물교환이나 종자 박람회와 같은 생산품 교환 등을 발의하여 대안적인 시장을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지역 생산품과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① 지역 지식

우리는 **지역 지식과 문화적 가치가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단언하며** 다양한 지역적·집단적 경험과 실천을 밝혀낼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교류와 연대를 통해 힘을 모았다. 우리는 종자, 지역적 종자 망, 자연적·전통적 영농과 대안적 시장을 보전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강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지역 지식의 활용을 장려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이 지식을 살아있는 것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과 토착민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지식을 보존할 것

이다. 우리는 식량 생산과 결합된 전통적 지식의 사유화와 특허를 포함한 생명체와 지식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적 재산권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지역 지식을 가르치도록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 지식과 지혜를 강조하고 촉진하면서, 각 지역사회가 자신의 영토 내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안적인 해법을 수집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자신이, 그리고 그들의 지역적 조직이 실시한 연구를 지지할 것이다. 이는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한 편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 물, 종자, 가축을 보전하는 데 기여한다.

① 농업생태적 생산과 수확

우리는 지역 식량 공급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으로 민감한 생산 시스템을 촉진할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식량생산은 소농과 가족농에 의해 농업생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축업은 목초지를 보존하면서도 이를 고기, 우유 및 여타 식품, 그리고 섬유, 연료 및 여타 제품을 얻기 위해 활용하는 전통적인 이동식초경계적 목축농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어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류와 어장, 산호초, 맹그로브[관목이 자라는 해안 습지] 늪 및 여타 어류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지역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어류와 여타 수중 생물을 낚는 어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임업은 임산물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숲 거주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① 국제적 수단 및 프로그램의 활용

우리는 국제적인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식량 주권 및 연합적 권리를 옹호할 것이다. <유엔 세계 인권선언>, <유엔 토착민 권리 선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생명다양성에 관한 협정> <농업발전국제기금> 등이 개발한 의정서·결정·가이드라인·프로그램, 예를 들어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유전자조작물질의 수입과 생명체에

대한 지적재산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 소규모 생산을 촉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도 있다. 우리는 정부가 식량주권을 지지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국제적 협정을 이행하도록 압박할 것이며, 이러한 협정의 틀 안에서 식량 주권을 침해하는 정책과 관행을 제거하는 법안을 발효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러한 수단 및 관련 국제적 협상 포럼을 통해 우리는 농민, 목축농민, 유목민, 어민, 토착민 등의 권리를 촉진할 것이다.

❶ 토지개혁과 영토에 대한 공동체적 통제

우리는 포괄적이고도 진정한 토지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토지개혁은 여성, 토착민, 소농, 어민, 노동자, 목축농민, 이주자 및 미래 세대를 지탱하고 각기 다른 공동체가 영토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에 관한 관례적인 권리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여성이나 배제된 공동체를 차별한다면 정정되어야 한다. 토지개혁은 토지-물-종자가축 품종 등의 사용에서 수출품 보다 식량 생산과 여타 지역적 필요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한 사용자들의 필요를 인정하는 한 편 맹그로브의 파괴나 해안해양 생태계의 취약함과 같은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영토를 보호하는 공동체 기반 영토 관리를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저-충격 생산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산업적-대규모 농업에 맞서 싸움으로써 우리의 영토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는 2009년 이스탄불 물 정상회의에 모인 대안을 제출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물 영토의 공정한 공유와 관리를 추진할 것이다.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맞서 싸울 것

우리는 기업 주도의 세계적 자본주의 모델과 그 기구, 그리고 각 공동체가 식량 주권을 옹호하고 쟁취하는 것을 가로막는 정책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의 식량생산과 유통을 기업이 통제하도록 촉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도전, 기업의 관행에 대항하

는 직접 행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 국제 무역

우리는 무역 자유화에 반대하는 투쟁과 지역적 생산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을 결합시켜 식량 주권을 수립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무역기구(WTO), 지역적·양자간 무역 협정, 덤핑, 식량 원조의 정치적 이용과 조작을 겨냥할 것이며, 모든 나라가 국내 생산시장을 보호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덤핑을 막기 위하여 대규모 식량농업 수출국의 공급 관리 및 가격 지지 등의 대안적 정책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기업이 아닌 가족농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에서는 대안적 농장법(Farm Bill)이, 유럽에서는 대안적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적 생산을 위협하는 “값싼” 식량의 대량 수입에 맞서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식량주권을 침해하는 무역 규범과 국제 금융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필요를 위협하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양자간·다자간 협정에 대한 저항을 지속할 것이다.

● 초민족기업

우리는 우리의 영토와 생산 시장과 식량 소비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주창함으로써 식량 사슬에 대한 기업의 통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각 국 정부가 식량 생산과 유통을 기업이 아닌 공동체가 통제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우리는 초민족기업에 반대하는 직접적 전략으로서 생태적 생산(농업생태, 목축농업, 전통어업 등)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식량 체계 내 특정 기업의 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국제적 불매운동 및 캠페인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이 식량 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① 분쟁과 점령

우리는 점령과 장벽, 국경의 군사화에 맞서 싸울 것이다. 분쟁과 점령은 민중과 공동체가 힘든 조건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중요한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민중을 갈라놓고 이들이 지역의 식량과 생산을 위한 토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여기에는 점령 하에서 살면서 영토가 장벽에 의해 나뉘고 분쟁과 재앙에 고통 받는 모든 민중과의 연대를 포함한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와 운동에게서 경험과 전략을 서로 배움으로써 분쟁과 점령, 재앙에 맞선 우리의 투쟁과 저항을 강화할 것이다.

① 유해한 기술

우리는 곡물동물나무의 유전자조작, 산업적 양식, 가축 복제, 식량 방사선 조사에 맞선 우리의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 녹색 혁명을 위한 동맹>과 식량 원조를 통한 유전자 조작 곡물 도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종자와 동물의 불임을 유도하는 터미네이터 또는 여타 기술을 막아내기 위한 일국적 캠페인을 조직하는 한 편 이러한 기술의 도입을 중단시키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나노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이런 기술은 이미 식량과 농업에 도입되어 현재 건강, 환경, 농/어민의 경제를 새롭게 위협한다.

① 단종경작 및 식물성연료

우리는 식물성연료의 산업적 생산에 반대하는 국제적 캠페인을 조직할 것이다. 이는 초민족기업에 의해 통제되면서 민중과 환경에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우리는 생산적인 토지를 식물성 연료, 종이 펄프, 유전자 조작 수목,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산업적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단종 경작지로 전환시키는 생산 모델의 파괴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녹색사막[식물성연료 생산 플랜테이션] 반대 캠페인을 통해)

① 기후변화

우리는 산업적 농업이 기후변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규탄할 것이며 탄소 시장이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기후 정의를 보장하는 데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지방적·지역적 수준의 기후변화가 식량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며, 특히 기후변화가 우리의 종자, 동물, 어류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성이 기후 변화의 영향과 효과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자연 재해를 일으킨다고 보며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가 적응과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지역 간 연대와 교류에 바탕을 둔 전략을 개발할 것이나, 항상 지방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서 식량 주권을 촉진할 것이다.

식량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 강화

우리는 동원, 동맹 구축, 교육, 전 세계 운동들 사이의 소통과 공동행동을 통해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① 동원

우리는 식량 주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정부 정책, 기업, 기구에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 부문을 망라하여 동원할 것이다. 중요하게 우리는 목축농민으로서, 어민으로서, 소농으로서, 여성으로서, 토착민으로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역 출신의 공동체로서 식량 주권을 실천하고 확대하기 위해 함께 할 것이다. 공동의 의제를 형성하고 공동의 정책 제안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식량 주권을 쟁취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 단결된 운동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연대 구축과 자체 운동을 강화하기

우리는 조직·협동조합·연합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비자, 학생, 학계, 의료인, 종교 공동체, 환경 정의 운동, 물 정의 운동, 대규모 댐·채취산업·전쟁·점령·재해에 피해를 입은 민중 등 다양한 이들 간의 전략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식량 주권 쟁취를 위한 운동을 구축할 것이다**. 우리는 도시와 농촌 간, 생산자와 소비자 간, 농민, 어민, 목축농민, 토착민 간의 건설적인 관계를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이주자 조직과 함께 연대를 구축할 것이며 그들의 우선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우리는 이주자들의 출신국과 거주국 양자의 사회운동 및 이주자 조직 간의 네트워크와 동맹을 강화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권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과 지역의 종자와 문화를 방어하는 데 나서고 있는 여성 조직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식량주권을 쟁취하는 우리의 집단적 투쟁에 필수적인 민중 및 공동체와 협력할 것이다.

① 교육

우리는 식량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치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조직과 운동 내에서 서로에게서 배움으로써 인식을 제고할 것이며, 남반구와 북반구의 도시 소비자 및 환경주의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의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교육 수단으로는 의식 고양의 날, 지역의 지식에 기초한 워크숍, 학교 제도 안에서의 정치 교육 및 대외활동 등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에 의존할 것이며 식량 주권을 살아 숨 쉬게 할 교육의 경험을 전수할 것이다. 우리는 이주, 이주자들의 상태, 식량과의 관련성, 우리의 전통적 권리와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이 우리의 식량 주권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지역 식량 소비의 중요성, 유전자조작물 질과 살충제 사용의 효과 등에 관해 교육을 시행할 것이다.

① 소통

우리는 기업의 선동에 맞서고 세계화된 산업적 식량 체계에 도전하는 한 편 훌륭한 지역적 경험과 지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와 지역의 상황에 기초하여 소통 수단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Radio Mundo Real>, 웹사이트 및 공동

채 라디오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분할에 가교를 놓을 것이다. 우리는 닐레니 2007 웹사이트를 유지할 것이다.

● 행동의 날

우리는 관련 조직들이 조직하고 추진하는 행동의 날을 정하고 참여할 것이다. 여기서 식량 주권에 초점을 두는 한 편 모든 사회 구성원들, 특히 여성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월 16일: 세계 식량주권의 날
3월 14일: 세계 대형 댐 반대의 날	11월 21일: 소규모 어민의 날
4월 17일: 국제 농민 투쟁의 날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
10월 12일: 토착민 저항의 날	12월 18일: 세계 이주자의 날

위에서 예시된 공동 전략과 행동 의제는 <주제별 워킹그룹>과 <부문/지역 토론> 보고서들을 요약한 것이다. 여기서는 작성된 모든 제안서들을 종합했다. 아래에는 <지역/부문>에서 제안된 몇 가지 특별 행동의 사례를 보여준다.

지역별 구체적 행동계획안

● 아프리카

- 농업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제외할 것을 호소, 경제협력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거부와 협상 중단 요구
- 우리의 종자를 통제하기 위해 초민족기업과 그들을 지원하는 기구의 모든 조치 거부, 유전자조작물질, 특히 불임종자의 아프리카 도입 중단

- 아프리카는 분명하게 스스로 먹일 수 있으나 세계화가 우리를 방해해왔음. 우리 농민들은 생태 농업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실천가다. 특히 여성들은 오늘날 식량 생산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는 완전히 인정되고, 지지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

● 서/중앙 아시아

- 점령과 전쟁하의 농민들, 특히 징발, 집속탄, 분리장벽 때문에 토지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연대 투쟁. 미디어 행동, 점령국의 생산품 불매운동, 점령지 농민들의 시장 기회 강화.
- 생태 친화적 지역 시장 운영 및 소규모 생산자들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규모 생산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 반대 투쟁
- 밀을 비롯하여 지역 내 농업적 다양성을 주창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공동 투쟁 계획

● 남아시아

- 농민을 토지에서, 어민을 바다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 투쟁, 무토지 농민이 토지를 쟁취하는 투쟁 조직
- 물·종자·토지 사유화에 반대하는 지역적 투쟁 조직, 유전자조작물질과 Bt 면화(몬산토의 살충제 내성 유전자조작 면화) 반대 직접 행동, 유전자조작물질 없는 마을 선언
- 남아시아에서 닐레니 2007과 유사한 포럼을 조직화하여 지역적 차원의 강령을 작성하고 다양한 분야 출신의 폭넓은 민중을 대상으로 식량주권 문제에 관한 훈련 제공

● 동남/동아시아

-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어류 무역, 초민족기업에 반대하는 투쟁
- 지역 내에서 포괄적이고 진정한 토지 개혁을 쟁취하기 위한 소농·어민·토착민 투쟁 지원

- 식량 주권의 기본틀을 구체화하고 민중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 내 각 부문 및 나라간 동맹 구축 소통을 강화하기

●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 단종경작, 녹색사막, 유전자조작물질, 식물성연료 반대 투쟁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플랜 콜롬보 반대 투쟁
- 해양/해안 자원 방어, 물 접근성 방어, 물 사유화 및 대규모 댐 반대

● 북아메리카/멕시코

- 식량주권에 관한 대대적인 교육 실시, 미국 농장법(US Farm Bill)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에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 FTA에서 농업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 미국인들은 워싱턴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 인들은 미국 접경지역에서 시위. 농민들도 이 투쟁에 참가할 것이며 토착민, 여성, 청년, 노동자들도 참여할 것.
- 유전자조작물질 반대, 불임종자 금지 캠페인 지속, 전 세계 각 국에서 이를 금지시키는 활동을 전개, 특정 초민족기업을 타깃으로 한 캠페인 전개.

● 유럽

- 자유무역협정(FTA)/경제협력협정(EPA) 반대 투쟁을 해당 무역 블록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전개, 경제협력협정 반대 세계 행동 주간 참가, 식량주권을 기초로 공동농업정책 개정.
- 유전자조작물질·불임종자 기술(특히 독일 본에서 열리는 9차 생물다양성협약 회의에서.), 식물성연료, 초민족기업의 통제에 반대하는 캠페인 지속. 이 캠페인에서 식량 주권의 요소들을 밝혀내고 촉진하기, 닐레니 선언을 지지하는 새로운 주체들과 협력.
- 공동체 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체계 촉진. 아직 이를 실행하지 않는 나라도 포함. 지역 시장 강화, 대형 할인 매장의 압력 분쇄

부문별 구체적 행동계획안

농민

- 식량 주권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 실시
- 초민족기업 및 종자에서 대형 할인 매장에 이르는 식량 사슬에 대한 기업의 통제에 맞서는 투쟁
- 종 다양성을 파괴하는 유전자조작을 통한 산업적 단종경작에 반대하는 투쟁 전개, 우리의 선택지로서, 초민족기업에 대한 무기로서 생태 농업 촉진.

어민

- 맹그로브와 같은 해양/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의 수위를 높이기. 이러한 생태계를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관리하는 한 편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산업적 농업과 파괴적 어업에 반대하는 한 편 생계형/전통적 어업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 지속
- 해안 지역의 사유화 및 자유화, 바다 개방 반대. 해안 지역에 대한 접근권 및 전통 어민/양식어민에 의한 통제 쟁취

목축농민

- 목축농업주의(Pastoralism)가 식량주권에 필수적이며, 목축농민들이 생존을 위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제고. 목축농업주의를 지지하는 다른 부문과 동맹 건설, 우리는 목축농업주의를 지지하는 국제적인 날을 조직할 것이다. 인권과 토착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다른 부문과 함께 전개.
- 모든 차원에서 목축농업주의 운동을 강화하고, 우리의 운동을 전통적인 사회 조직과 부속 구조에 기반을 두며, 다른 공동체와 영토를 공유할 방안 모색. 공동체

내 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강화

- 식량 주권 운동을 지지하면서, 목축농민들은 지역 정부 및 주 정부가 이주 및 국경을 넘는 이주를 허용하는 법을 도입하도록 압박할 것임.

토착민

- 토착민 영토 보호. 지금까지와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식량 생산 지속. 대안 언론을 통해 식량 주권 쟁취를 위한 토착민들의 투쟁 알려내기
- 토착민들의 지역적·일국적 네트워크 및 일국적·국제적 조정 공간 강화하기, 일국적·지역적 동원을 옹호하는 국제적 지원 모색, 예를 들어 4월 17일 초민족기업에 반대하는 농민 운동에 대한 전 세계적 참여, 농민운동이 10월 12일 (토착민 저항의 날)에 참여하기
- 식량주권에 관한 아티틀란(과테말라) 토착민 선언 및 여타 유사한 국제 선언 채택

이주자

- 팔레스타인, 세우타-메리아(모로코로 둘러싸여 있는 스페인 영토), 멕시코-미국 국경 등의 장벽, 국경의 군사화, 보호소, 이주자 및 그 가족의 범죄화, 강제출국 등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하거나 연대, 지원하기.
 - 이주자 및 그 가족이 다른 이들이 지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법화하기 위한 투쟁. 이주자를 위한 법적 권리의 기본틀을 추진하기.
- 초민족기업 및 이들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국가의 정책과 모델에 반대하기, 강제이주 및 이주자의 상황을 악화하는 협정, 전쟁, 폭력에 반대하기.

소비자

- 지역 시장 및 학교·병원·정부 기관 공공 조달 촉진하고 생산자를 위한 공정한 가격 보장
- 이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공동체 지원 농업 운동 및 지역 식량 체계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고 경험을 교류

하기. 지역적 제안을 세계적 운동과 연계하기

- 농민이 교육자가 되어 도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소비자의 태도가 주되게 엘리트 및 언론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수 교육이 필수적.

식량주권을 위한 닐레니 2007 포럼의 공식적인 결과물(닐레니 선언)은 www.nyeleni2007.org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는 말리와 서부 아프리카 농민 조직, 여성조직 등의 선언문이 있다. 또 포럼을 위한 여러 가지 글, 기사 모음, 사진, 비디오 등 준비 문서도 있다.

국제 운영위원회, 2007. 3.

번역: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광우병 투쟁을

한미FTA 반대투쟁으로

쇠고기 협상으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한미 FTA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한 이번 한미쇠고기협상의 배경은 바로 한미FTA다. 양국이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미국 의회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 FTA 비준의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이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는 한 한미 FTA를 절대 비준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미국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한미 FTA 비준의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했다. 그 이전에,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가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선결 조건이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명박은 쇠고기 파문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고 나선 대국민 담화 자리에서 오히려 '유가·식량·원자재 값의 상승과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므로 것은 '이념이나 정파를 떠난 국가적 과제인 한미 FTA 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민중의 건강권을 포기하고서라도 한미 FTA를 조속히 발효시켜 재벌과 초민족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더욱 보장하겠다고 나선 이번 쇠고기 협상 타결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성장의 본질을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2006년 4월 한미 FTA가 체결된 직후 '한미 FTA 협상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모든 분야를 다 내주더라도 한미 FTA를 체결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이익이다." "한미 FTA를 기회로 삼아 국내 산업을 철저하게 구조조정하고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을 갖춘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여 만성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극복하

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가,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한국 사회에 도입하고 국내 산업을 철저하게 구조조정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 한미 FTA였다. 결국 광우병과 한미 FTA를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무능한 노무현 정권이 맡아먹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되었지만 결국 자신도 결국 노무현 정권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러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내 재벌과 초민족자본의 생존전략이며,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가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는 과정이었음을 민중들은 충분히 경험했다. 이명박은 취임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 운운하며 이러한 전략을 노골화해왔다. 결국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미 FTA를 시급히 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명박의 호소는 민중이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케케묵은 이야기일 뿐 아니라 민중의 미래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한 세계 경제에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로 시작된 투쟁은 국익 논리에 눌리고 분야별 이해득실 논리로 분할된 한미 FTA 반대투쟁을 다시 한 번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불어 민중의 미래를 포기하고 재벌만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미 FTA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한미 FTA를 통해 한미 양국의 지배세력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것은 노동자 민중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의 지배세력은 한미 FTA에 마치 ‘민족 전체’의 이익이 달려있는 것처럼, 이것이 실패하면 ‘민족 전체’에 크나큰 위협이 초래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민족 전체’의 이익이란 없다. 오직 초민족자본의 이익만 있을 뿐이다. 해외로부터 엄청난 부를 수탈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하여 동아시아에서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창출에 안정성을 다지려 한다. 그리고 이를 아시아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로 확대하려 한다. 이에 한국의 지배세력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편승하여 한국사회에서 금융화를 더욱 촉진하고 재벌이 세계 경제 체제에 더욱 깊

속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협상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한국사회 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 즉 미국식 기준을 확산하여 초민족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서비스 산업을 신(新)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금융화한 세계 경제에 효과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더욱 안정화한다는 것이다. WTO, OECD에 가입하여 재벌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던 김영삼 정부, 1997-98년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도입된 IMF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김대중 정부, 세계적인 추세인 FTA 체결에 적극 나서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겠다고는 노무현 정부, 한국사회를 ‘선진화’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는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지배세력의 일관된 경제위기 극복전략은 ‘금융세계화’에 적극 편입하는 것이다.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체체 두고 스스로 초민족자본이 된 소수의 재벌을 중심으로 생존하겠다고는 것이다. 생산과 고용이 아닌 금융적 팽창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지연 시켜 가는 세계 경제에 편입하여 소수의 재벌만 살아남겠다고는 지배세력의 전략에 결코 노동자 민중의 이익은 없다. 그를 위하여 ‘투자자’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반면 민중의 모든 권리를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활동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취급하고 철저히 짓밟는 것이 한미 FTA의 본질이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하는 동안, IMF의 처방에 따라 한국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응한 일부 기업은 주가폭등, 수출확대를 통해 팽창에 성공했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는 가중되었다. 농업·농촌은 붕괴되고, 빈곤은 확대되었으며, 노동권·여성권·건강권·교육권 등 민중의 권리는 파괴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한 국가의 탄압과 폭력은 더욱 거세졌다. 그러는 동안 고삐 풀린 초국적 투기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고, 한국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확대해갔다. 그동안 지배세력이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놓아 외쳤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이렇듯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제 광우병 문제로 시작된 전 국민적 저항은 한미 FTA 반대투쟁으로 지속되고, 경제위기에 대한 재벌 중심의 ‘생존

' 전략에 편승해 그 혜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이와 전혀 다른 민중의 대안을 형성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미 FTA, 대안은 없는가?

WT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양자간지역별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운동들은 이러한 협정이 초국적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리고 이 협상 과정이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각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강탈과 착취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구축하고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라는 국제소농조직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sina)의 구호처럼 국제금융무역기구와 초민족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위로부터의 세계화)에 저항하고 인민들의 운동이 국제주의(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지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은 국제적인 교류를 단절하는 '쇄국'이 아니다.

<미주사회동맹>은 대륙차원의 공동행동의 경험과 '아메리카사회포럼' 등을 계기로 한 토론을 통해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Alternatives for the Americas)을 발전시켰다. 이 문서에서 <미주사회동맹>은 "우리는 세계화라는 형태로 추진되는 신자유주의를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이것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축하는데 그치지 말고 긍정적인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 지배적인, 그리고 외적으로 강요되는 형태의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경제를 폐쇄하고 보호주의적인 장벽을 세워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립주의적인 무역 정책을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다. …… 우리는 다른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세계적, 그리고 대륙적 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대안적인 규범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사회포럼 및 대안세계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시민연합>(ATTAC France) 역시 국제적인 교환에 대해 "국제적 교환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것은 수단들에 불과하다. 그 수단들은

각각의 상황들에 맞게 민주적으로 정의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에 봉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미주사회동맹>과 <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시민연합>은 국제적인 교환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첫째, 민중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각 국 정부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각 국 정부는 공공서비스가 시장화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적 부문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및 취약인구의 보호, 식량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균등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외채를 매개로 한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하고 각 국 정부는 독자적인 금융·재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적인 무역과 투자는 통제되어야 한다. 무역과 투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초민족 자본의 이해에 일차적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민족적 발전전략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종속되지 말아야 하며 투자는 높은 질의 일자리, 지속 가능한 생산, 경제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각 국 정부는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투자, 특히 투기성 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웃 국가들,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교환이 선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경의 개방은 사회·환경·경제·재정적 조화를 요구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사이의 연대가 조직되는 것이 본질적이다. 북이 획득 불가능한 자원을 남으로부터 이전하기 위해 활용되는 북-남 간 교환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일차 원자재의 가격안정화 체계의 구축, 환율의 안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화폐 체계의 개혁이 시급하다.

넷째, 노동권·여성권·식량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교육, 의료, 에너지, 물, 의약품 등에 대한 전 민중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며 시장의 규칙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적 권리는 국가의 책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각 국 정부는 특정한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

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필수약품에 대한 접근성, 생명다양성의 보장, 원주민의 지식, 전통적인 농업 지식 등은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생명특허는 거부되어야 한다.

특히 <미주사회동맹>이 제출한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제시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및 최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발의한 인민무역협정(TPC, 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에도 참조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은 ALBA 협정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각 국 정상들이 주도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 주도의 FTAA가 아닌 다른 형태의 지역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제시하며 FTAA 반대 투쟁을 조직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 자유무역과 불평등 교환

자유무역의 원칙은 확실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원칙의 하나다. 자유무역을 억압하는 모든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교리는 상품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화폐와 금융 메커니즘의 자유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극히 불평등한 국가들 사이의 자유무역의 원칙은 곧 대제앙을 낳았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분할 경쟁이 붕괴한 후 구 식민지 국가가 형식적 독립을 쟁취했지만 과거 식민모국과 맺은 경제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했고, 이는 주변부에 만연한 ‘저발전’(underdevelopment) 이론의 현실 배경이 되었다. 또한 1980-90년대 중심부 국가가 주변부 국가에게 강요한 자유무역의 원칙이 초래한 결과도 명백하다. 강제적인 경제규범으로 인해 국제경쟁에 노출됨으로써 전통적인 산업은 극히 불안정해지고 초민족기업의 활동이 확대되었고, 결국 주변부 국가의 ‘탈산업화’라는 결과마저 나타났다. 생계형 소농은 붕괴하고 초민족기업을 비롯한 거대 토지소유자가 이를 대체했다. 이는 주변부 민중의 실업과 빈곤이라는 참화로 귀결되었다.

여기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재건했던 자유무역의 원칙은 사실상 ‘자유 기업’의 원칙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20세기 초반까지도 유럽, 미국, 남미의 일부 국가, 일본에서 국내시장은 여전히 자본축적과 소득증가의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높았고, 국제무역이 이를 대체하지는 않았다. 공업화를 추진한 나라도 국제무역은 자원(일차 기초재료)의 수입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 이후, 각국들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국의 실업을 ‘수출’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주의 장벽을 쌓기 시작하면서 대외무역은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보호주의는 대공황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형성되고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같은 국제경제기구가 구축되면서, 이른바 ‘자유세계’ 내에서 국제무역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러한 경제적 변화의 핵심 주체는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오늘날의 초민족기업)이었다.

미국의 전후 경제질서 구상에서 두 가지 핵심 축은 미국 기업 활동의 자유였고, ‘국제화폐’로서 달러의 권력이었다. 미국은 마샬플랜을 통해 유럽 재건을 지원하는 대가로 미국의 기업이 유럽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보장받 고자 했고, ‘기업의 자유’, ‘투자의 자유’는 마샬플랜의 이면합의 사항이었다. 현실 적으로도 당시 유럽은 경제기반의 붕괴 때문에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매우 취약했고, 달러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미국은 마샬플랜 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건설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달러를 유럽에 제공했으나, 유럽의 달러부족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었다. 이에 따라 유럽은 전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이런 조건에서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첨단제조업이나 석유정 제업 부문을 중심으로 유럽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개 시했다 (미국의 자본은 이미 아메리카라는 대륙적 규모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자 유기업 활동을 해외로 확장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나아가 유럽공동시장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다국적기업 자회사는 유럽 기업에 대한 합병·매수에 확대했고, 유럽의 자본 역시 타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제휴나 합병·매수에

나서면서 유럽계 다국적기업도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다. 또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를 사실상의 세계화폐로 격상시켰고, 이에 따라 달러 사용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는 미국 자유기업이 작동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다. 결국 냉전을 통해 미국이 구축한 '자유세계'는 곧 자유기업의 세계였다.

이처럼 자유기업의 원칙이 강요되고 초민족자본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제국주의 자본에 의한 수탈의 통로는 직접적인 식민지배와 달리 더욱 교묘하거나 은폐된 형태로 전개되었다. 직접적투자에 의한 이윤과 여기에 반드시 동반되는 국제 대부자본(오늘날의 '초민족은행')에 대한 이자는 '신식민지' 국가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잉여가치의 착취를 의미했다. 둘째 생산수단의 수입과 상품의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교환은 잉여가치를 제국주의 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분배했다. 셋째, 생산기술의 수입에 대한 대가로 기술지대가 유출된다 (특히 1970년대 다국적기업의 기술특허로 신장율은 이자나 배당의 신장율을 상회했다). 넷째, 자본수입국이 초국적자본에게 제공하는 조세나 규제 상의 다양한 특혜도 잉여가치가 재분배되는 메커니즘이었다. 이러한 경로가 결합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제국주의 자본이 주도하는 수탈메커니즘이 전후 반세기 동안 구조화되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오늘날의 세계적 착취와 불평등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초민족기업이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본의 세계적 집중운동은 점점 더 강화되었고, 그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의 자본을 확보하게 되었다. 흔히 사례로 제시되는 것처럼 제네럴모터스의 매출액이 덴마크의 국내총생산보다 크고, 도요타의 매출이 포르투갈보다 더 큰 것처럼, 세계 200대 다국적 그룹의 매출액 합계는 세계 모든 나라의 국내총생산 합계의 26.8%에 이르고, 100개 산업그룹의 내부 거래액은 전체 세계무역의 30%를 차지한다. 따라서 초민족적 산업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는 내부 자금의 흐름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금융시장에 집중시키고 있다. 초기 단계 다국적기업에서 중앙집권적 재무관리는 1970년대 외환 위험과 금리 위험을 관리하는데 머물렀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정점의 지주회사는 포괄적인 이윤 센터로서 기능하며 (종종 금융기관을 직접 운영한다), 금융화의 가장 능동적인 핵심 주체로 부상한다.

또한 자유기업의 활동은 점점 더 세계경제의 3극으로 집중되고 있다. 초민족자본

이 구축하는 해외직접투자, 기업 내 무역, 자회사의 수출, 국가간 하청의 망은 북 아메리카, 서유럽, 동아시아를 삼극체제로 하는 위계화된 세계를 구축했을 뿐이다. 삼극체제 외부의 국가는 세계경제 시스템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자유기업이 구축하는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통합된 세계’라는 그들의 구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의 3극으로 통합된 지역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세계경제의 3극에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특징은 금융적 규율을 강요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식시장 부양’은 종종 절대선으로 간주된다), 노동자에게 고강도·장시간, 저임금노동을 불가피한 선택이어나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요한다. 결국 3극을 중심으로 세계적, 지역적, 일국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구조조정이란 (마르크스의 용어법에 따르면)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이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보다 더 우세해지는 과정이며, 동시에 이를 금융권력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다. 게다가 (초민족)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과거에도 낮은 임금률이었지만, 오늘날 금융권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잉여유출, 자본도피의 자유를 누리고, 결국 이는 주변부의 경제위기의 기본적 특징이 된다.

이로써 세계무역에 참여한 모든 이득이 누리는 ‘비교우위’와 ‘무역이득’, ‘경제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은 이미 현실에서 소멸했다. 우리는 여전히 공식적인 중등교육기관을 통해 고전과 무역이론을 배우지만, 여기에는 세계자본주의 체계에서 무역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불평등교환의 현실도 등장하지 않고, 나아가 최근 초민족자본의 운동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현대적인 표준무역이론이나 신무역이론 역시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전과 경제이론의 모순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더 읽으면 좋은 것>

- 「비교우위, 자본축적, 사회주의」, 『월간 사회운동』 2006년 6월호